

6.1 지방선거 부천시 사회복지정책 제안집

6.1 지방선거 부천시 사회복지정책 제안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06.01)를 맞이하여 부천시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현안을 정책화하여 후보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부천시민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참여단체》

(가,나,다순)

부천시노동복지회관	부천시노인복지시설	부천시문해교육협의회
부천시사회복지관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부천시장애인복지기관	부천시정신건강연합회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천시지역자활센터연합회	부천시청소년관련기관·단체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	

목 차

■ 7대 핵심의제

① 공공의료기관 건립	3
②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체계적 운영기반 조성	4
③ 민간위탁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보조금의 항목별 지원 및 인건비 확보	5
④ 디지털 기반사회에서의 서비스 접근성의 확충	6
⑤ 생활지원주택 설립	7
⑥ 안전한 부천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운영	8
⑦ 위기대상 긴급보호체계 구축	9

■ 분야별 의제

(가,나,다 순)

① 노동 분야	13
② 노인 분야	15
③ 문해교육 분야	23
④ 보건의료 분야	25
⑤ 아동 분야	27
⑥ 여성 분야	30
⑦ 외국인주민 분야	35
⑧ 자활 분야	39
⑨ 작은도서관 분야	43
⑩ 장애인복지(거주시설) 분야	46
⑪ 장애인복지(이용시설) 분야	51
⑫ 장애인복지(직업재활) 분야	56
⑬ 정신장애인복지 분야	58
⑭ 종합사회복지관 분야	59
⑮ 청소년 분야	66

■ 참여단체 현황

[별첨]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정책 제안 참여단체 현황	77
------------------------------------	----

부천시역 사회복지분야 정책의제

■ 7대 핵심의제

순서	정책명	P
1	공공의료기관 건립	3
2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체계적 운영기반 조성	4
3	민간위탁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보조금의 항목별 지원 및 인건비 확보	5
4	디지털 기반사회에서의 서비스 접근성의 확충	6
5	생활지원주택 설립	7
6	안전한 부천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운영	8
7	위기대상 긴급보호체계 구축	9

■ 분야별 의제

분야	순서	정책명	P
노동	1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인력 확보	13
노인	1	ICT 기반으로 한 노인 거점 문화공간 확충 및 디지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15
	2	요양시설 및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16
	3	고령자 이동권 확대 및 욕구에 맞는 지원인력 확보	17
	4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에 앞장서는 부천, 부천시 노년기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확대	18
	5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지원	19
	6	노인일자리 선도모델 개발 및 확대	20
	7	지역 공공의료기관 역할 확대	21
	8	관내 노인일시보호 인프라 확충	22
문해교육	1	부천시 성인기초 문해교육 발전 방향 제안	23
보건의료	1	부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병원 설립	25

아동	1	냉난방비 지원 정례화	27
	2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증액	28
	3	부천시 아동 통합 돌봄체계 구축	29
여성	1	생애주기별 돌봄정책으로 시민의 일생활균형지원 고도화	30
	2	가족상담의 공적서비스 확대	31
	3	안전한 부천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운영	32
	4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의 지속 및 확대 운영 필요	34
외국인 주민	1	외국인주민 전용 시설 확충	35
	2	외국인주민 통역 전문성에 대한 확보	36
	3	외국인주민 스포츠의 장 마련	37
	4	외국인주민 행정기관의 확대	38
자활	1	저소득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서 지원	39
	2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독려 및 자활·자립 촉진을 위한 자활성공수당 지원	40
	3	자활기업 서비스 및 생산품 공공기관 구매촉진	41
	4	자활사업을 위한 무상 공공임대 시설 확대	42
작은 도서관	1	공립 작은도서관 사서 처우 개선	43
	2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개선	44
	3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확대	45
장애인 (거주 시설)	1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지원 체험홈 운영비 지원	46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체험홈 운영 활성화	47
	3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돌봄 종사자 인력 추가배치 지원	48
	4	거주시설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원	49
	5	부천시 피해 장애 아동 365 쉼터 운영	50
장애인 (이용 시설)	1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인프라 확충	51
	2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부천시 역할 확대·강화	53
	3	장애인 복지택시 일반 승용차량 도입 및 무장애 도시 기반 조성	54
	4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55
장애인 (직업 재활)	1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확보를 위한 판로확대 지원강화	56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57

정신 장애인	1	정신장애인을 위한 생활지원주택 시범사업 제안	58
종합 사회 복지관	1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력 기반 강화	59
	2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제안 1	60
	3	사회복지사 인건비 보존과 복지사업비 지원	61
	4	부천시 1인가구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정책 추진	62
	5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확대	63
	6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제안 2	64
	7	복지시설 소외지역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반 마련	65
청소년	1	전염병에 대비한 공공기관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수립	66
	2	위기아동·청소년 돌봄시스템 구축	67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68
	4	청소년·청년 등을 위한 안심아르바이트 공공플랫폼	69
	5	부천시 직업계고 졸업생(후기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70
	6	보·교육기관 및 공공급식 친환경급식 실현	71
	7	부천형 청소년 통합(공적+문화+복지)카드 제작	72
	8	청소년전담공무원제 의무 시행	73
	9	위원회 참여를 통한 청소년 대표성 확보	74

7대 핵심의제

- ① 공공의료기관 건립
- ②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의 체계적 운영기반 조성
- ③ 민간위탁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보조금의 항목별 지원 및 인건비 확보
- ④ 디지털 기반사회에서의 서비스 접근성의 확충
- ⑤ 생활지원주택 설립
- ⑥ 안전한 부천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운영
- ⑦ 위기대상 긴급보호체계 구축

핵심1

공공의료기관 건립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1977년 의료보험 실시 후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해 공공의료 투자보다는 민간의료에 떠 맡겨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고, 수요는 정부가 통제하는 왜곡된 의료환경이 발생함. 의료계와 정부 및 국민간의 갈등, 공공병원의 절대적인 부족, 보건의료 자원의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 부천시 보건의료 시설이 충분하다고는 하나 공공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역임. 부천은 여러 개의 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어 민간 보건의료 시설이 충분하지만, 장애/재활 부문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가 취약함. 장애인이 부천시 관내에서 재활 부문 의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2%(시도평균 71.1%), 정신 부문 31.3% (시도평균 67.8%)로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2019 공공보건의료통계집, 국립중앙의료원)
- ◇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5.7%의 공공병원이 전국민 코로나 환자 70%를 감당. 코로나에 감염된 부천시민은 코로나 전담 공공병원 없어서 타 지역으로 이송하여 입원 치료를 받음.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에는 민간병원에서 병실 부족의 이유로 환자 거부 등 필수의료 부족
- ◇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특히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 의료, 돌봄이 사회 전체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임.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출산부터 사망까지 공공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함.

제안내용

1.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재정마련 및 조례제정
2. 감염병 및 재난 발생 시 총괄 시스템 구축
3. 생애전주기 필수의료 제공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4. 공공산후조리원, 공공호스피스, 공공장례식장 설립
5.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 분야 지원시스템 강화

핵심2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의 체계적 운영기반 조성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1995년 출범 이후 2005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새로이 발족한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존의 기관장 중심의 형태에서 실무자, 실천가 중심의 구조로 변모하였고(당시 시군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법인 설립은 전국 세 번째로 이루어짐) 2002년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사회복지사업법이 요구하는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를 실천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천시가 전국의 대표적인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기도 하였음.
- ◇ 부천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제안,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행사 및 공동자원 개발 배분, 기관 간 정보교류, 종사자 역량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대표적인 부천시 사회복지기관들의 네트워크 중심체이기도 하며 2022년 현재 41개의 사회복지관련 조직이 소속되어 활동 중에 있음.
- ◇ 사회복지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인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에 기반한 인적 물적 자원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이미 경기도 내 21개 지자체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공간확보와 예산지원을 다수의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음. 현재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협의회 회장 또는 사무처장직을 역임하는 해당자의 기관에서 사무국을 꾸려 운영하다보니 임원 변경 시마다 사무국 이전 등의 운영상의 한계가 존재함.
- ◇ 이에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의 보다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역할수행에 기초가 될 환경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제안내용

1.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마련
2.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거점공간 확보(사무국 운영의 안정성 제고, 회의 및 교육공간확보를 통한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촉진)

핵심3

민간위탁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보조금의 항목별 지원 및 인건비 확보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시 사회복지관의 경상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합쳐진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이에 복지관들은 매년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보조금은 90%이상 인건비 이거나 운영보조금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임.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인건비 충당을 위해 후원금을 확보해야 하는 복지관도 많은 상태임.
- ◇ 이에 경력직 직원 퇴직 시 신입직원의 채용을 통해 인건비 충당의 노력을 하고 있음.
- ◇ 부천시에서도 복지기관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운영보조금의 인건비 비확보는 장기근속자들의 지속적 근로에 부담이 되는 상황임.
- ◇ 이에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 확보가 필수적임.

제안내용

1. 경상보조금을 운영비와 인건비로 항목별 구분이 되어 지원되어야 함.
2. 복지기관의 근로자가 지속적인 근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인건비 확보가 되어야 함.

핵심4

디지털 기반사회에서의 서비스 접근성의 확충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됨. 이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 향상과 제도 및 여건의 조성 등을 통해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서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제29조 <사회보장 전달체계>에서 지역적, 기능적으로 균형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 필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연계가 필요함을 명시함
- ◇ 대한민국 사회복지, 사회보장서비스는 신청주의에 기반하여 운영됨, 정보가 중요한 사회에서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경우 신청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신청하지 않은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됨. 우리 사회는 정보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 2021년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주최 3차 인천복지정책 연구포럼에서 돌봄 사각지대 발생 이유로 신청주의와 한정된 자원, 정보접근의 부재를 고집었으며, 물리적 접근성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커 시설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 ◇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시대, 정보에서 배제되는 주민 발생, 정보의 전달과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야 함, 디지털 사회에서는 더욱 정보접근 매체 부족과 이를 활용하는 기술과 지식 부재로 인해 복지사각지대 다수 발생
- ◇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의 정책방향에 맞춰 디지털 기반사회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체계 조성과 사회서비스 보장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정책 추진 중요

제안내용

1. 정보화 기기(태블릿, pc, 노트북, 정보검색기기 등) 학습 기자재로 공공 구매, 정보 취약가정 지원(학습권의 기초)
2.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ICT 기반 정보화교육, 온라인 정보검색 플랫폼 마련, 학습공간 조성)
3. 사회복지시설의 거점기관 운영을 통한 촘촘한 마을 접근, 마을지향 사회서비스 제공
4.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특수학교 설치
5. 사회서비스 정책제안을 위한 “열린 신문고” 제도(실시간 의견 수렴과 대안 마련 창구)

핵심5

생활지원주택 설립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의 독거 취약계층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거주와 거주 환경의 문제임
- ◇ 독거 취약계층이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전세, 월세 등에서 혼자 거주할 수는 있지만 많은 취약계층들이 독거로 거주하면서 지역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 ◇ 취약계층의 독립 거주에서 문제는 지역사회 지지체계가 취약하고, 지역 내에서 또 다른 소외의 현상이 나타나고, 건강의 어려움, 가구내문제, 생활문제, 일상문제, 금융문제, 긴급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점, 사람과의 관계 형성의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 취약계층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지역화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취약계층분들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복지지원시스템이 내부에 있어야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확보되는 새로운 모델의 거주 공간인 생활지원주택을 설립하고, 운영 지원을 위한 부천시만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야 함

제안내용

1. 생활지원주택 관련 조례 제정
2. 생활지원주택 구성
 - * 대상자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으로 1인 가구
 - * 거주기간 :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음
 - * 거주인원 : 1인 1가구(또는 한 주택의 개인사생활 보호가능한 1인 1방)
 - * 거주비용 : LH 기준으로 보증금을 거주자가 지급하고, 월세를 거주자가 지급함
 - * 공유공간 :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공간(작은도서관, 지역카페, 공유키킨, 사랑방 등)
 - * 복지지원 : 공유공간 구성과 건물 내에 사회복지사 2-3인이 거주하여 지원함
 - * 운영형태 : 부천시에서 거주공간을 마련하고(또는 LH 주택), 복지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위탁운영체제로 운영함, 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분하여 위탁운영(노인분야, 장애인분야, 정신질환자 분야, 노숙인 분야)
 - * 거주형태 : 빌라 전세대 또는 다세대주택 전세대 또는 단독주택 형태(1인1방) 사용 형태

핵심6

안전한 부천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운영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2021년 3월 기준 부천시 1인가구는 전체 34만여 가구중 11만명이며, 40대 이상의 1인가구는 경기도에 많이 거주하고, 특히 시군구별로 50대 이상의 1인가구는 부천에 가장 많이 거주함
- ◇ 부천시 전세대 통틀어 여성가구의 비율이 30% 이상인데, 1인가구의 여성가구는 49.2% 이상이며,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은 세대가 20대 이하와 50대, 60대 이상의 연령층으로 대부분 빈곤율이 높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계층임.¹⁾
- ◇ 2018년 부천시주거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른 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평가²⁾로 여성, 남성 모두 소음에 불만족(만족도 평균 3.24점)을 균열, 침하, 붕괴 등의 위험에는 대부분 만족한 결과(만족도 평균 3.97점)가 나타나는데, 여성의 경우 균열, 침하, 붕괴>물샘>채광>환기>실내 추위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채광과 환기, 난방에 취약한 주거지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치안과 물리적 안전성에 불안감이 큼
- ◇ 청년세대는 주로 월세살이를 하는 문제로 주거상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에게 불편함을 해결하는 요청을 해야 하고, 부천시 주택의 42% 이상이 20년 이상의 노후주택임을 고려했을 때 원도심 거주 노인세대 또한 경제적, 물리적인 지원과 돌봄이 있어야 하는 상황임.

제안내용

1. 1인가구 돌봄과 지원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돌봄지원체계와 지원조례 제정
2.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대상 집수리지원 사업. 주택수리 서비스 기사 양성을 비롯한 각영역별 1인가구 교육 및 정보제공 채널 마련, 1인가구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3. 여성안심홈세트지원 - 여성 1인가구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현관문 보조키, 스마트 초인증,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4종 세트를 지원
4. 관용차 활용한 심야 귀가지원 차량 운영
5. 저소득 1인가구 기초실태 및 심리정서(우울, 자살충동 등)에 대한 연구조사

1) 부천시 성인지 통계 및 2020 부천시 기본통계 / 가계금융복지패널조사 2020

2)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물리적 상태가 양호.

핵심7

위기대상 긴급보호체계 구축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지난 2018년 경기도 관내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발생율(10만명당 범죄율)을 기준으로 보면 부천시는 52.9%로 6위를 차지하였음. 지난 2009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 5대 강력범죄 경찰서별 발생건수에서 경기도 부천시 부천중부경찰서(현 원미경찰서)가 전국 1위를 차지하였음
- ◇ 지난 2016년 부천에서는 여중생이 백골상태 시신으로 발견되고, 초등생 주검이 사망 3년만에 발생되었음. 대안을 모색한 청소년 포럼에서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판과 거리 청소년 대책 부재, 가정폭력의 은폐 현실 등 담당함 호소
- ◇ 부천역 등 청소년 탈선과 범죄, 성폭력 및 성매매의 위험, 가출 청소년 몰림현상,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범죄 다수 발생, 유해환경에 대한 개입과 대책 부족, 사회적 위험 환경 노출 확대
- ◇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피해자의 대응 방식으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45.6%,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간 경우가 12.5%로 나타남. 또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자의 85.7%는 외부에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음. 도움을 청한 경우에도 가족이나 이웃, 경찰 등 미미하였음. 양육자에 의한 아동폭력 가해율은 27.6%, 가족원에 의한 폭력 4.7%, 돌봄가족에 의한 어르신 폭력은 3.8%로 나타남(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 부천시는 2014년 여성친화도시, 2018년 WHO 고령친화도시, 2019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등을 달성하여 전국 친화도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음. 또한 2021년 사람 중심의 포용도시를 표방하며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음. 이로써 지역사회통합돌봄 및 장애인 권익 인권센터 운영, ZERO 주택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인 및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일자리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음

제안내용

1. 아동, 여성 등 가정폭력, 학대 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시설 마련(외부로 이주되지 않고 지역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마련 필요)
2.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전용 쉼터, 365 안전센터, 단기 거주시설, 독립 주거공간, 위탁가정센터 도입 등)
3.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마련(단기요양보호시설 등)
4. 장애인 365 쉼터 확대(체험홈, 탈시설을 위한 중간의집 확충)
5.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강화와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

분야별 의제

- ① 노동 분야
- ② 노인 분야
- ③ 문해교육 분야
- ④ 보건의료 분야
- ⑤ 아동 분야
- ⑥ 여성 분야
- ⑦ 외국인주민 분야
- ⑧ 자활 분야
- ⑨ 작은도서관 분야
- ⑩ 장애인복지(거주시설) 분야
- ⑪ 장애인복지(이용시설) 분야
- ⑫ 장애인복지(직업재활) 분야
- ⑬ 정신장애인복지 분야
- ⑭ 종합사회복지관 분야
- ⑮ 청소년 분야

1

노동 분야

제안1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인력 확보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 결과 부천시의 감정노동 종사자는 151,856명으로 추정, 전체 취업자의 약42.6%에 해당하는 규모임. 직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매장 판매 및 상품대여직, 조리·음식 서비스직, 돌봄·보건 및 개인생활 서비스직이 전체 감정노동 종사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음.³⁾
- ◇ 감정노동자들은 업무에 필요한 일부 감정만을 드러내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나 느낌은 억압하거나 회피함으로써 ‘감정의 자기 소외’를 경험하게 됨. 의식적인 노력 없이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감정을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느끼게 되는 상태가 됨. 이로 인해 감정노동자는 내 감정이 없는 것 같은 일종의 감정적 마비와 무감각의 상태를 경험하는 수동적인 상태에 이르며 자아존중감을 상실할 수도 있음.
- ◇ 보호받지 못하는 감정노동자의 삶은 불건강한 생활습관, 정신적(우울증·공황장애·자살 등)·신체적(근골격계 질환·탈진 등) 건강문제, 이직률 증가 및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 발생을 불러일으킴.
-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나 조례의 제정이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자의 권리의식 제고와 사업의 책임의식 향상, 그리고 소비자의 정의로운 소비행태의 진작이라 하는 총체적인 제반인식의 전환이 수반되어야 함.
- ◇ 이를 위해 부천시 조례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설계되어야 하며, 중요성, 긴급성, 위험성 등의 요소가 고려된 설계와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인력 확보가 필요함.

제안내용

1. 선제적 예방을 위한 권리보장교육(노동자·사업주·소비자), 보호매뉴얼 개발 및 보급,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 알권리 실현 및 건강한 인식문화 확산
2. 피해자 사후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지원, 위험군 관리지원, 법률상담 및 구제지원 등을 실시, 감정노동자의 피해 치유 및 개인비용 부담 최소화

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0년 상반기) 원자료 분석

3. 중·장기적 활동을 위한 연구 과제 개발, 매년 인식변화 조사, 사업장 실태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와 평가 실시, 부천시 노동시장 특성에 맞춘 사업 운영
4. 감정노동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원활히 사업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전문 상담사, 실무자)의 확보

2

노인 분야

제안1

ICT 기반으로 한 노인 거점 문화공간 확충 및 디지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코로나19 등의 전염성 질환 확산,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따라 노인의 디지털 문화 적응은 필수적임. 이에 어르신의 디지털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 디지털 활용 문화 인프라 확충, 대상자 역량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 ◇ 부천시외의 경우 스마트 경로당 운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을 통한 ICT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강점이 있음. 또한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음에 따라 대상자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수행인력(스마트 매니저, 생활지원사 등)이 확보되어 있음.

제안내용

1.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지역사회 거점 확대
: 지역사회 경로당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접근성이 높은 시설(주민지원센터 등)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거점에 ICT 시스템을 도입하고 노인복지관에서 계획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 거점에서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스마트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2. 지역사회 어르신 중심의 주민 소통의 장 마련 및 디지털 복지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보
: 지역사회 디지털 문화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뿐만 아니라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할 수 있음.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확보(와이파이 확대설치, 디지털 서비스 활용교육 확대 등)가 필요함.

제안2

요양시설 및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현재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은 지원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음. 장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시설로 구분이 되지만 재정의 주된 재원이 보조금이 아닌 사회보험금(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차이로 인해 처우와 관련된 지원제도에서 제외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생활지원사의 경우 1인당 평균 16명의 어르신을 돌보며 각 가정을 방문해 일상 지원, 외출, 병원 동행 등 육체·정신적 노동 강도가 센 맞춤형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종사자 대부분이 임시직이며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를 받고 있음

제안내용

1.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 대체인력 사업 등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하는 방안 필요
: 이를 위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의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요원들에게도 처우개선비와 대체인력 지원 사업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2. 돌봄 종사자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종사자 복지 수준 제고 및 근무환경 개선
: 노인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종사자 복지 수준이 높아져야하며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 마련되어야 함.

제안3

고령자 이동권 확대 및 욕구에 맞는 지원인력 확보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고령자의 경우 다양한 노인성 질환을 소지하고 있어 거동의 불편함, 병원 및 은행 방문 등의 외부 활동에 제약이 큼.
- ◇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택시, 저상버스 등이 증차되어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지역사회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노인의 경우 디지털 활용 역량과 정보 접근성이 낮아 현재 변화하는 온라인상 신청, 앱호출 등에 있어 제약이 있음.
- ◇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진료 등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대형 병원 등을 방문할 경우가 많음. 인접지역에 한정되어 이동 되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별 지원내용이 상이하여 장거리 이동 시 일부 두세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을 별도로 신청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음.

제안내용

1. 여가 및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수단 강화
: 교통약자이동지원 서비스 확대(교통약자 택시 증차, 취약시간대 운영 증설, 교통약자 특화 버스 확대 운영 등), 택시회사 연계 송영 지원서비스, 교통비 지원 등이 요구됨.
2. 고령자의 이동권과 더불어 외부활동 지원 인력 확충
: 병원, 은행 등의 방문 시 이용 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상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인력이 확대되어야 함.

제안4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에 앞장서는 부천, 부천시 노년기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확대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전체 우울증 환자의 40%가 60세 이상이며, 노인 우울증은 치매의 전구 증상일 수 있다.(2019.03.13-한경오피니언 김진세 고려제일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 노년기 우울증은 치매 발병률을 더욱 심해지게 하는 요인임. 우울감에 대한 상담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노인 전문 신경정신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제안내용

1. 정신건강 취약 노인 감소, 악화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과 치료가 필수적인 요소임. 따라서 정신건강 진료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진료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서비스 연계 횟수 확대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됨.

제안5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지원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시는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체계적 수행을 통한 노인의 경제 및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고령사회 기반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음.
- ◇ 이에 2022년 기준 5,678명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담당자(구)노인전담인력)가 수행기관에 배치되었음.
- ◇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노인일자리 담당자도 확대 배치되고 있음. 이에 이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2015년 노인일자리담당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부와 협의 추진, 2018년 노인일자리담당자 퇴직적립금 확보, 2019년 성과금 1,257천원이 확보되는 등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의 처우가 높지 않고 무기계약 혹은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이직율이 높아 업무 연속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 또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처우지원수당(초과근무수당 등)이 동일하게 지원되지 않아 차별의식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제안내용

1. 부천시 노인일자리 담당자(계약직)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
 - 현재 부천시 노인일자리 담당자 중 전체인원의 50% 이상을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전환에 따른 추가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정화를 꾀함.
2. 노인일자리 담당자 초과(시간외)근무수당 지원
 - 부천시 정규직 초과근무수당(1인당 최대 7만원) 수준에 맞춘 예산 지원 필요.

제안6

노인일자리 선도모델 개발 및 확대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유입과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라는 시의적 상황으로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참여 목적에 맞는 노인일자리 개발이 필요함.
- ◇ 부천시는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체계적 수행을 통한 노인의 경제 및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고령사회 기반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음. 이에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기준 5,678명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 2021년 만족도조사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전 후 가장 큰 변화로 ‘경제적 도움’이 47%로 긍정적인 효과로 조사되었음. 또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해 선호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하고 있어 노인들의 참여욕구가 높음.
- ◇ 이에 지자체 및 주무부서, 수행기관 간 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 선도모델(ex, 사회서비스형+기업연계형)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에 기여함은 물론 기업의 일부 예산 부담을 통해 부천시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일자리 확보 필요함
- ◇ 그럼에도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각종 법규 및 제도적인 제약, 부과적인 업무, 조직관리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제안내용

1. 지역특화형 기업연계 노인일자리 개발
 - 부천시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과 연계한 상생형 노인일자리 선도모델 개발 및 운영
2. 지역사회 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노무 및 법률 자문 지원
 - 노인일자리 사업장 운영 관련 노무 및 법률 자문 지원을 통한 사업운영 어려움 해소

제안7

지역 공공의료기관 역할 확대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코로나 19 사태에서 부천시 노인요양원 입소노인이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경우 타 장소(부천시 공공 의료기관)로 이송되지 못하고 요양원 자체가 코호트 격리되어,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함께 생활하면서 요양원 내에서 감염이 확산됨(초기대응 시스템 부족)
- ◇ 이는 빠른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되었으며 종사자, 입소자 및 가족 모두 심리적·신체적 부담감을 가지면서 코로나 19 사태를 이겨내고 있음
- ◇ 이에 부천시는 공공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예로 대구의료원을 비롯한 전국 공공 의료기관은 평소에는 민간 병원이 시행하지 않는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수행하였으나, 코로나 19사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병원 전체를 비우고 ‘코로나 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였음.
- ◇ 부천시도 감염병 위기 단계를 고려하여 부천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어떻게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제안내용

1. 감염병 등 팬데믹을 대비한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 확대 필요
 - 부천시 공공의료기관을 거점으로 민간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대응 등 초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감염질환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가정, 시설 등)물품 지원 확대

제안8

관내 노인일시보호 인프라 확충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 발생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2020년 기준 추정치매환자수 840,192명, 전체 노인의 10.3%)
- ◇ 치매노인이 배회하다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인계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경찰 임시숙소의 경우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치매노인의 재실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학대피해노인쉼터의 경우 학대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쉼터 입소가 제한됨.
- ◇ 따라서 부천시 관내 노인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 시스템 확충이 시급함.

제안내용

1. 치매노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스템 구축 필요 - 긴급틈새돌봄사업과 같이 위기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시설로 연계하여 단시간 치매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3 문해교육 분야

제안1

부천시 성인기초 문해교육 발전 방향 제안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부천시 성인기초문해교육 잠재수요자(저학력 성인)현황 (2020년 통계청)

	전체인구(20세이상)	초등학교 잠재수요자	중학교 잠재수요자	합계(비율)
경기도	10,515,689	200,327	551,210	751,537(7.1%)
부천시	668,989	12,726	39,857	52,583(7.86%)

◇ 부천시는 성인기초문해교육과 관련하여 2006년~2008년까지는 상향 지원하였으나, 2008년~2022년 14년동안 동일 금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반면, 국가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서울/인천/시흥/용인/하남/동두천 등)는 문해교육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음.

◇ 부천시 저학력 성인 및 교육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문해교육과정의 연구 개발과 전문적 소양을 갖춘 문해교사 배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나, 오히려 부천시에서 성장한 문해교사가 예산지원이 더 많은 인근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학력인증 교원에 대한 기준은 더욱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문해교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상황임.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성인문해 기초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의 아래와 같은 한계로 성인문해 학습자들의 기초문해력 향상이 더디고,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이 어려움 상황임.

- 동일 단계에서도 비문해학습자 간의 수준차이가 큼.
- 학습자 1인당 교사의 집중이 크게 요구됨.
- 학습 내용에 대한 충분한 반복과 기다림이 필요함.

◇ 부천의 성인문해기초교육은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에 포함되어 이를 근거로 지원되고 있으나, 현재 전국의 82개 지방자치단체는 성인문해기초교육 지원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음. 또한, 문해학습자의 연령과 특성, 국가의무교육 수준의 지원 필요성에 비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학습 조례와는 별도의 문해교육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

제안내용

1. 부천 관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20여개의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함.

구분	1개 프로그램당 최소 운영시간	단가	예산
초등단계	240시간	30천원	7,200천원
중학단계	450시간	30천원	13,500천원

- 서울시의 성인문해 프로그램의 평균 강사비 단가가 30,000원(종로/강북/관악 등)으로 그와 비슷한 단가의 보전이 필요함.
 - 비문해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배포하는 교재인 나무 시리즈와 중학 단계 책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 교육을 위해서는 초등의 경우 최소 240시간, 중학의 경우 최소 450시간의 교육 시간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강사비 보전이 뒤따라야 함.
2. 문해교육의 질적 성장과 전문적인 문해교사의 타 지역 이동을 막기 위해 초등, 중학 문해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원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하여 전문적인 문해교원들이 부천에 남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초등·중등 교원 1인당 × 월 50천원 × 12월 = 1인당 년 600천원 수당 지급
 3. 문해교육 학습자의 수준별 교육 진행을 위해 문해교육 프로그램당 최소 학습자 수를 하향 조정해야 함.(기존 10명 -> 5명)
 4. 평생학습 조례와 별개의 부천시 기초문해교육 조례 제정을 통해 기초문해학습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면 함.

4 보건의료 분야

제안1

부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병원 설립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은 공공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역임. 민간 의료기관은 수익성이 좋은 진료 영역에 집중하여 필요 이상의 검사나 진료를 하는 ‘과잉진료’를 하게 되고, 예방적 치료가 중요한 만성질환관리를 소홀히 하며, 의료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진료받지 못하는 의료소외 계층에 대한 ‘과소진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부천시민이 상급 종합병원을 부천시 관내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63.6%로 시도 평균 47.4%보다 높지만, 장애인이 부천시 관내에서 재활 부문 의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2%(시도평균 71.1%), 정신 부문 31.3% (시도 평균 67.8%)로 시도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2019 공공보건 의료통계집, 국립중앙의료원).
- ◇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5.7%의 공공병원이 전국민 코로나 환자 중 70%를 감당. 그나마 부천시민은 코로나 전담 공공병원 없어서 타지역으로 격리. 민간병원은 코로나시기 환자 거부 등 필수의료 책임 역할이 부족함.
-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중요함. 부천은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펼치고 있고 의료 분야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협조가 부족함. 공공병원을 통해 일차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퇴원 환자에 대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함.
- ◇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함. 보건의료는 누구에게나 삶의 필수 조건이어서 나이, 주거, 소득, 고립, 장애 등 삶의 다양한 양상에 맞춰 제공돼야 함. 이를 위해 당사자인 시민의 제안, 협력, 감시, 평가가 있어야 함. 공공병원 운영에 시민이 참여할 때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익 논리에 지배되는 현실을 바꿀 수 있음.

제안내용

1. **공공성 강화** : 공공병원 설립으로 부천시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의료와 상호보완
2. **통합돌봄 연계** : 부천시 공공병원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 연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사회 복지시설, 지역사회 상호협력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중심 역할
3. **재난대비 총괄 기관** :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총괄 기관 역할하여 재난 상황 발생시 부천시 보건

의료를 총괄하고 부천시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중심축 역할 필요함

4. **생애 전주기 필수의료** : 생애 전주기 필수의료를 제공하여 부천시민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 장애인 및 어린이 재활 치료 병동, 장애인 친화 분만실 및 병동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말기암 환자 등을 위한 호스피스, 공공장례식장 설치,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 및 의료 취약 계층 진료, 통합간병시스템 제공, 부천시립 요양병원 역할 강화, 예방 중심 건강증진 사업 운영, 일차의료기관 협력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기후 위기 대응력 약한 계층 장기적 체계적 대응

5. **시민 참여 보장 및 건강평가 정책수립** : 시민 참여형 공공병원을 위해 민관거버넌스 구축, 병원 운영에 시민이사회를 두는 등 시민참여 보장, 부천시민 건강평가 공공의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함.

5 아동 분야

제안1 냉난방비 지원 정례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52조 8항에 근거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하는 곳으로,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음.
- ◇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돌봄 대상 아동이 오랜 시간 머무는 곳으로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
- ◇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 냉난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중 냉난방비는 공공요금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목임.
- ◇ 가스비의 경우 2021년 1월 11.6961원/MJ였으나 2022년 1월에는 21.5760원/MJ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인상됨.
- ◇ 더욱이 앞으로 2022년에만 전기 요금은 두 차례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가스 요금은 3차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냉난방비 증가로 인한 센터 운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임.
- ◇ 특히 겨울 방학과 여름 방학 기간은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센터에 머물게 되어 냉난방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해 평소보다 몇 배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함.
- ◇ 이전에 지급되었던 냉난방비의 경우 겨울 방학(1월, 2월)과 여름 방학(7월, 8월)이 지난 후 추경으로 늦게 편성되어 실효성이 떨어졌음.
-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가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냉난방비는 열악한 처우에 있는 시설장 혹은 대표자에게 전가되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제안내용

1.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센터수	횟수	합계	비고
냉난방비 지원	600	60	1	36,000	연초 지원 필요

제안2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증액(안)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고 동일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타 사회복지시설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급여와 처우를 받고 있음.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보조금에서 부천시의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
- ◇ 부천 인근 서울과 인천에서는 2020년부터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하고 있음.
- ◇ 사회적 환경과 돌봄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2021년부터는 기존에 분리 교부되었던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공기청정기, 안심귀가 알림서비스 비용을 기본 운영비에 포함되어 운영비의 부족이 가중되고 있음.
- ◇ 2022년에는 기본 운영비가 부족하여,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사용 의무 비중을 10%에서 8%로 줄였으며, 30인 이상 시설은 29인 이하 시설 규모의 프로그램만을 사용하도록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가 개정됨.
-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추가운영비는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퇴직적립금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임.
- ◇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추가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19인 이하	450	450	450	3년간 증액 없음.
29인 이하	450	450	450	
30인 이상	500	500	500	

제안내용

1. 부천시 추가 운영비의 증액은 위에서 제기한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운영의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추가보조금 증액 시 소요 예산(추계)

(단위 : 천원)

구분	증액(안)	지역아동센터 수	개월 수	합계	비고
지역아동센터	450	60	12	324,000	
총계				324,000	

제안3

부천시 아동 통합 돌봄체계 구축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는 부처별로 이용 연령, 지원 대상을 조금 달리하여 다양한 전달체계가 존재함.
- ◇ 아동종합실태조사(2018,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이상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이 4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다양한 돌봄 전달체계가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아동이나 돌봄 취약계층 아동의 발굴이 쉽지 않은 현실임.
- ◇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체계는 교육부의 학교 돌봄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 ◇ 부처별 온종일 돌봄체계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업명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대상	초 1~6학년	만 6~12세 미만	만 18세 미만	초 4~중 3학년
지원기준	맞벌이 가정 중심	맞벌이 가정, 입주민 중심	취약계층 중심 (돌봄취약계층 50%이상 이용)	취약계층 우선지원

- ◇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전달체계가 부처가 서로 단절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 집행에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 코로나 이후 아동 돌봄 안전망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으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아동의 돌봄은 더 이상 개인 혹은 각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제안내용

1. 부천시에 존재하는 아동 돌봄 체계의 정책 및 행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체계 담당 부서 설립
2. 부천시 아동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인 부천시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6

여성 분야

제안1

생애주기별 돌봄정책으로 시민의 일생활균형지원 고도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시는 합계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경기도 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19년 부천시 합계 출산율 0.81명,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번째⁴⁾
 - 2021년 부천시 경제활동 참가율 50.4%, 경기도 31개 시·군 중 17번째⁵⁾

- ◇ 부천시 여성 79.1% 결혼, 육아, 임신·출산으로 경력단절 경험이 있음⁶⁾
 - 부천시 19~5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79.1%
 - 직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28.3%), 결혼(27.7%), 임신·출산(25.2%)

- ◇ 아동청소년과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증가⁷⁾
 - 부천시의 18세 이하 인구 111,906명(전체인구의 약14%), 65세 이상 인구 121,051명(전체인구의 약15%)

- ◇ 19~34세 청년여성의 약14%가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⁸⁾
 - 부천시 19~34세 청년여성인구는 89,214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1.12%에 해당

- ◇ 이러한 지점에서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활성화와 시민의 일생활균형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조건이 고려된 맞춤형 돌봄지원 정책 강화 필요

제안내용

1. 옥길지역 등 여성시설이 없는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취·창업 교육 훈련 서비스’ 등 양육과 가족돌봄 중인 여성의 교육 접근성 강화 및 진로 장벽 해소와 경력 이음 지원정책 강화
2. 청년여성 취·창업 특화공간 운영
3. 아동·노인 등 가족돌봄 지원이 절실한 워킹가정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정책 강화
4. 돌봄장벽 조건 해소와 시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돌봄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개인과 사회의 맞돌봄에 대한 인식개선 정책 시행

4) 2019년 통계청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5) 2021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6) 2019 부천시 사회조사

7) 2022년 3월 현재 부천시 인구 현황

8) 2020년 여성가족부,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제안2

가족상담의 공적서비스 확대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최근 3년 동안 부천시의 세대수와 세대당 인구를 비교해보면 세대수 인구는 꾸준히 3천여 가구가 증가한 반면에 세대당 인구는 2.44명→2.32명까지 줄어들고 있음. 이는 부천에서도 기존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비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남을 시사.

[최근 3년간 부천시 세대수와 세대당 인구 현황]

연도	부천시 인구	세대수	세대당 인구
2019	829,996명	340,160가구	2.44명
2020	847,788명	344,495가구	2.38명
2021	804,990명	346,968가구	2.32명

- ◇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와 맞물려 COVID-19로 인하여 개인의 심리가 불안정해지고 가족 간의 역할혼돈, 갈등이 증가하게 되면서 가족상담의 필요성과 수요 꾸준히 증가.
- ◇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사업은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19년 3,638명, 20년 1,614명(코로나로 상담사업 중단), 21년 3,016명에게 가족상담을 제공하였고 그중 70%가 가족 간의 문제(부부, 부모-자녀, 원가족 등)로 상담을 받음. 현재 대기자들은 **평일 주간 기준 3개월, 야간 기준 6개월~1년까지 기다렸다가 상담을 받는 상황.**
- ◇ 가족상담의 양적 수요증대와 중요성에 커짐에 따라 공적 가족상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족상담 전문가 공급도 확대할 필요성 있음.
- ◇ 또한 상담의 양적 확장에 대응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담의 질적 보장도 필요함에 따라 상담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전문상담사 역량강화교육, 상담사의 처우개선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제안내용

1. 가족상담사업 수요에 맞춘 **상담서비스 확대 지원요청**
 - 상담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대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민원 발생(대기기간 3개월)
 - 가족구성원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및 상담사 공급확대를 통해 신속한 상담 개입 가능
2. 기존 가족 관련 서비스로 포괄하기 어려운 다양한 가족(미혼모·부, 청소년부모, 비혼동거가족 등)의 의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마련.**

3. 가족상담전문가(위촉직)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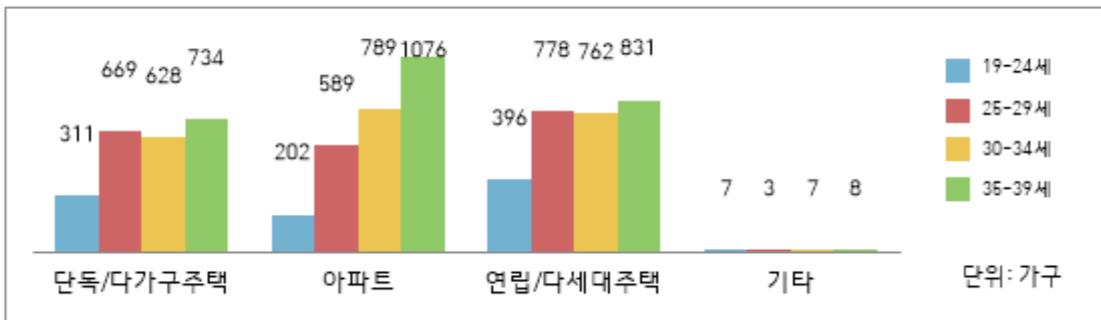
- 가족상담전문가(상담학 석사이상, 전문상담사자격증 구비) 전문인력 활용에 비해 상담사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편이므로 공적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풀 구성과 처우개선 필요.

제안3 안전한 부천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운영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시 전세대 통틀어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30% 이상인데, 1인가구의 여성가구주는 49.2% 이상임
- ◇ 2015년 70,236명, 2018년 77,345명, 2019년 80228명으로 1인가구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은 세대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연령층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임.⁹⁾
- ◇ 여성가구주의 경우 오피스텔, 기숙사, 특수 사회시설 등 불안정한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비교적 물리적 치안상태가 좋은 아파트 거주 비율은 24.1%에 불과함¹⁰⁾
- ◇ 청년여성의 경우 19~24세 연령대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다가구주택>아파트, 30~34세 연령대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단독/다가구주택 순으로 나타나며,¹¹⁾ 노인여성의 경우는 원도심 주택 거주 비율이 높음

부천시 청년 여성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유형 현황



- ◇ 2018년 부천시주거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른 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평가¹²⁾로 여성, 남성 모두 소음에 불만족(만족도 평균 3.24점)을 균열, 침하, 붕괴 등의 위험에는 대부분 만족한 결과(만족도 평균 3.97점)가 나타나는데, 여성의 경우 균열, 침하, 붕괴>물샘>채광>환기>실내 추위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채광과 환기, 난방에 취약한 주거지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치안과 물리적 안전성에 불안감이 큼

9) 부천시 성인지 통계 및 2020 부천시 기본통계

10) 부천시 성인지 통계

11) 주거실태조사 2018

12)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물리적 상태가 양호.

- ◇ 청년세대는 주로 월세살이를 하는 문제로 주거상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에게 불편함을 해결하는 요청을 해야 하고, 부천시 주택의 42% 이상이 20년 이상의 노후주택임을 고려했을 때 원도심 거주 노인세대 주거 상태 또한 물리적인 지원과 돌봄이 있어야 하는 상황임.

제안내용

1.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주거관리를 위한 행정서비스 체계 마련
2.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대상 집수리지원 사업. 주택수리 서비스 기사 양성
3. 여성안심홈세트지원 - 여성 1인가구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현관문 보조키, 스마트 초인증,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4종 세트를 지원
4. 관용차 활용한 심야 귀가지원 차량 운영
5. 주거 안전에 위협을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비상체계 등에 대한 교육과 정책에 대한 홍보도 확대

제안4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의 지속 및 확대 운영 필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현재 미혼모·부자 초기 지원사업의 경우 중위소득 72%에 해당하는 미혼모·부 가정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 ◇ 그러나 가정의 기초생계 유지를 위하여 주 양육자가 근로를 할 경우,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부모 가정에 함께 동거하는 경우 등본과 소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큰 실정이다.
- ◇ 이러한 사유로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립을 하지 않고 복지 서비스에 의존하는 대상이 증가하는 현상과 실제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제공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정의 증가의 문제, 저출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 ◇ 이에 소득 기준의 완화 또는 미혼모·부자 일반 가정까지 사업 참여자 기준을 확대 편성하여 유립형 시범 사업이 운영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 나아가 일상생활 속 쉽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관공서에서는 부천시 특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사업에 대하여 일반 상담 및 서비스 정보 확인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자발적 사업 참여자 발굴이 어려운 참여 대상임에 관내 본 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배정과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교육, 대상자 발굴 및 연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한층 강화 된 민·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제안내용

1.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 참여자 기준의 확대
 -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 소득 기준 완화 또는 미혼모·부자 가정 전체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 확대를 통한 취약 가정의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 및 자립 기능 강화(복지병 예방)
2.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의 민·관 협력 강화
 -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비자발적 사업 참여자에 대한 발굴 활성화 도모 및 서비스 연계 (Link)를 기반으로 한 사업의 효과성(자립 및 저출산) 향상 도모

7

외국인주민 분야

제안1

외국인주민 전용 시설 확충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현재 부천시 외국인주민은 총 51,232명 부천시 인구 844,148명 중 6.1%의 높은 비중임.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내 5위, 전국 7위의 외국인주민 분포임.
- ◇ 부천시 외국인주민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부천시디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전용 시설임)
- ◇ 부천시 외국인주민의 전용 공간의 확충으로 시설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나아가 외국인주민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교육을 받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

제안내용

1. 부천시 외국인주민 전용 시설 확충.
2. 강의실, 헬스장, 태권도실 등 교육 및 여가 시설을 갖춘 전용 공간의 마련으로 부천시 외국인주민 삶의 질 향상의 기틀을 마련.
 - 강의실 등 시설이 확충되어야, 외국인주민에게 필요한 강의 및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고정적인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주민에게 안정적인 프로그램 또한 제공할 수 있음.
3.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외국인주민 전용 시설의 확충은 외국인주민 최소한의 복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음.

제안2

외국인주민 통역 전문성에 대한 확보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시는 외국인주민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발생하고 있는 민원과 문제에 대해서도 중점으로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됨.
- ◇ 부천시는 외국인주민 전문 시설에 상근자와 활용 가능한 외국인주민 전문 통역사를 배치하여 시설에 방문하는 외국인주민의 초기 상담과 통역에 중점적인 특화 사업이 가능함.
- ◇ 일자리 창출로 인한 외국인주민의 소득 여건의 상승으로 인한 안정적인 국내 생활 정착 지원.

제안내용

1. 외국인주민 지원 전문 시설에 대한 상근 인력 확충.
 - 상근자를 추가로 배정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매일 방문하는 외국인주민 이용자들에게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의 토대 마련.
2. 외국인주민 통역 전문성 확보
 - 외국인주민 지원 전문 시설에서 가장 필요한 시간대를 파악하여, 국가별 통역사에 대한 인프라를 조사하고 이를 전문 시설에 파견함으로써, 국가별 외국인주민 응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을 통한 민원 해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음.
 - 전문 통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인건비 지원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제안3

외국인주민 스포츠의 장 마련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현재 부천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외국인주민 축구대회, 농구대회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화 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 코로나19 이후 외국인주민은 축구대회, 농구대회 등의 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하여,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함.

제안내용

1.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육 시설 대관 일정 확보
 - 외국인주민 체육 대회는 장기간의 일정이 아니라 단기간의 대회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임으로, 부천시 관내 축구 대회 개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2. 외국인주민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공간의 제공
 - 상/하반기 등의 체육 시설 대관 일정 확보로 최소한의 체육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한 삶 마련에 중요한 토대가 됨.

제안4

외국인주민 행정기관의 확대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현재 부천시는 약 5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
- ◇ 외국인주민에게 꼭 필요한 출입국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천시 거주 외국인주민들은 인천출입국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외국인민원센터(인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제안내용

1. 인천출입국사무소 분사무소의 설치
 -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비자변경 등 출입국사무소를 체류기간 중에 꼭 방문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김포시와 안산시 등은 출입국사무소 분사무소를 각각 설치하여 체류 외국인에게 최대한의 행정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부천시에는 분사무소가 없어서 체류 외국인 모두가 인천출입국사무소가 부천의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여,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지사(남부, 북부)의 외국인 민원 서비스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주민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외국인민원센터(인천)를 개소하였으며, 현재 부천시 외국인주민은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인천을 방문하고 있음.
 - 부천시에만 남부, 북부지사 2개의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외국인주민은 민원 처리를 위해 인천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행정임.

8

자활 분야

제안1

저소득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서 지원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최근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저출산, 저사망, 인구고령화와 함께 1인가구의 증가를 꼽고 있음. 생계를 책임져 주거나 아플 때 돌봐줄 수 있는 구성원이 없는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일상생활에서도 취약해질 수 있으며, 스스로 생계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경제활동을 부담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이 부재하므로 본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됨.
- ◇ 한국에서도 1인가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통계청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0.4%로 30%를 넘었음.
특히, 1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빈곤율 이하임. 전체 가구에서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의 소득을 얻는 가구의 비율을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2020년 한국 가구의 중위 경상소득은 연 2,092만원 정도로 전체 가구의 18.1%가 빈곤가구에 속하였음. 구체적으로 2020년 1인가구의 43.1%가 빈곤가구에 속하였음. 2인 가구의 경우, 평균소득은 1인가구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빈곤율도 19.2%로 1인가구보다 크게 낮았음(참고: 가계금융복지패널조사, 2020).
- ◇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 불안정, 주거 문제를 비롯하여 우울, 자살충동, 좋지 않은 생활습관 등으로 인한 신체 건강의 취약 등이 높았음. 또 이혼, 사별 등으로 1인가구가 된 경우 우울감이나 상실감 등을 경험하게 되고, 중장년 남성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사회적 관계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 친구와의 관계단절도 생길 수 있음. 이와 더불어 부모나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느라 1인가구가 된 중장년은 충분한 노후준비나 사회적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감 등을 겪게 됨.
- ◇ 경기도는 2020년 7월 15일에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근의 광명시도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2021년 11월 9일에 제정하여 이와 관련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음.
- ◇ 현재 부천시의 지역자활센터에는 약 676명의 저소득주민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이중 약 70%가 1인 가구이며, 이들 대부분이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나 미비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의 정서 지원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

제안내용

1.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 1인 가구 기초실태 및 심리·정서(우울, 자살충동 등)에 대한 연구조사
2. 저소득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부천관내 협의 체계 수립
3. 자활사업 연계 저소득 1인 가구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마련

제안2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독려 및 자활·자립 촉진을 위한 자활성공수당 지원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탈수급유지지원사업은 수급자의 탈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및 의회를 중심으로 탈수급 지원·유지에 대한 사업 지속 가능성과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1년부터 경기도 자활근로지원도 자체사업 추진방향을 토대로 취·창업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형태로 개편 후 운영되고 있음¹³⁾. 현재 경기도 내 33개 지역자활센터에서 해당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 이에 부천시 3개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① 취·창업 준비(자립계획수립, 근로저해요인 해소, 취업지원교육), ② 취·창업 지원(구인처 발굴 및 연계, 알선), ③ 취·창업 성공 사후관리(유지관리 모니터링, 성공 축하 프로모션) 3단계 과정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 하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대부분 낮은 취업 자신감, 적은 근무 경험, 높은 연령으로 자활사업 종결 후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이는 실업급여 수령, 수급자격 유지 희망 등 낮은 취업 의욕으로 나타나 취업 독려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 ◇ 이에 경기도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및 자활·자립 촉진을 도모하고자 2021년 탈수급유지지원사업에서 자활(탈수급) 성공수당 지원이 이루어졌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의욕 고취 및 자립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하지만 2022년 해당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취·창업 독려 방안마련이 시급함.
- ◇ 경기도 자활성공수당과 별개로 일부 지자체는 자활성공수당 자체예산수립을 통해 자활참여자의 취창업촉진을 지원하고 있음(성남, 시흥, 용인). 저소득취약계층 취창업률은 정부합동평가에도 반영되는 항목인 만큼 참여자 취창업률 견인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 부천시의 경우 3개 지역자활센터 모두 탈수급유지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성공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부천시도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취·창업 독려와 더불어 자활·자립 촉진을 위한 자활성공수당 지원이 필요함.

제안내용

1. 부천시 자활기금 활용 확대 기반 마련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성공수당을 지원하여 참여자의 자활성공을 촉진하고 있음. 이에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조례 개정을 통

13) 2022년 자활근로지원도 자체사업 운영 계획 - 탈수급유지지원사업, 자활 교육훈련 지원사업 - 지침. 2021.12.23. 경기도 복지사업과

해 참여주민의 자활성공을 독려하기 위한 기반마련이 필요함.

2.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독려 및 자활·자립 촉진을 위한 자활성공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자활사업 참여자(게이트웨이 미포함)
 - 지원조건 :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자, 신청일 현재 취·창업 유지 전제
 - 지원내용 : 취·창업 1개월, 3개월, 6개월 이상 유지 시 50만원씩 지원

제안3

자활기업 서비스 및 생산품 공공기관 구매촉진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현재 부천시에는 22개의 자활기업이 시의 인증을 받아 외식, 인테리어, 청소, 돌봄 등에서 서비스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음. 자활기업은 저소득주민들로 구성되어 자립을 도모하며 부천 지역 시민사회의 건강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자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부천지역 소상공인으로 자리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코로나19는 더 가혹한 시련이 되었음. 자활근로 과정을 통해 자립한 자활기업 주민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속가능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 ◇ 2021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의 서비스 및 물품 판매 등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었음. 이에 자활기업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 활성화 지원을 요청함.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내용

1.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에 자활기업 생산품(서비스 및 제품 등) 정기적 홍보
2. 자활기업의 활발한 사업 촉진을 위한 자활기금 지원

제안4

자활사업을 위한 무상 공공임대 시설 확대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지역자활센터는 공공부조 전달체계로서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참여자의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일구어나가는 핵심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있음.
- ◇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에게 자립의지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적 접근(직무소양교육)이 수반되어야 하고 아울러 저소득취약계층에 전반적으로 팽배한 우울증, 불안 및 자신감 하락 등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운동을 위한 공간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2018년부터 지역자활센터는 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의 핵심 수행기관으로서 센터별 평균 약300명 이상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과 상담의 역할이 부가되어 이에 대한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간적인 충족이 필요한 상황임.
- ◇ 지역자활센터의 공간확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2021년 12월말 기준 경기도 내 33개 지역자활센터 중에서 14곳이 지자체 건물을 무상임대하여 운영되고 있음.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활기금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기도하나 월임대료 받기를 희망하는 임대인의 요구에 맞지 않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전세권설정을 하는 등의 불편함으로 임대인이 사업장을 내주는 것을 거절하는 사례는 매우 빈번함.
- ◇ 상담실과 교육장, 그리고 사무실 등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임대보증금을 자활기금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월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임. 경기도의 지역자활센터 중 40%는 각 시로부터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천시의 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하여 60%는 상가건물 유상임대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많은 비용의 월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음.
- ◇ 특히, 월세임대는 계약기간 갱신 시마다 보증금 및 월세 인상요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사업장 이전을 피할 수 없으며 이전 시 이사비용을 포함한 인테리어 및 교육장비 설치 등의 제반비용 부담이 상당하여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 또한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은 기관별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평균 인건비 90.5%, 운영비 9.5%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시설비, 교육사업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순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예산 책정조차 하지 못하는 센터가 다수임.
- ◇ 공공부조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경제의 주요한 인프라로서, 지역자활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시설과 운영 지원에 대해 부천시의 관심이 시급한 시점임.

제안내용

1. 교육장, 상담실 등 필수적인 공간마련이 가능한 국·공유지 무상임대 지원
2. 공공기관내 판매 시설의 무상 지원 확대
3. 지역자활센터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운영비 지원

9

작은도서관 분야

제안1

공립 작은도서관 사서 처우개선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시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내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음.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음.
- ◇ 공립 작은도서관 사서의 경우 시립도서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밀착형 독서문화운동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에서 사서 자격증 없이 단순 대출·반납 업무만을 다루는 운영보조근무자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음.
- ◇ 실무자로서의 전문 자격을 갖춘 사서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운영보조근무자에게 해당하는 각종 수당(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과 복지혜택 또한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구조임.
- ◇ 사서가 오래 근속할수록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호봉간 격차는 2만원에 불과하며, 경력인정의 경우 관내 동일업무 수행시 최대 7년까지만 인정되고 있어 임금체계 및 경력인정을 통한 처우개선이 필요함.

제안내용

1. 호봉간 차이를 인정하는 적절한 임금 체계 개선을 통해 사서의 이직률 완화
2. 사서직공무원에 준하는 복지포인트 및 각종 수당(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3. 도서관 내 동일업무 관련경력 100% 인정

제안2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개선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 지역 내 ‘공립 작은도서관 사서’는 대출·반납 등 도서관 기본 업무를 포함하여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독서문화 공동체 형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상적이고 전문화된 독서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도서관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 작은도서관이 단순히 자료를 이용하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독서문화활동이 진행되고, 지역주민 조직을 통한 마을문화활동의 장이 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작지만 큰 도서관으로 변모함에 따라 사서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 또한 늘어나고 1인사서가 감당하기에는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임.
- ◇ 부천시에는 크게 시립상동도서관, 시립수주도서관, 시립별빛마루도서관으로 나뉘어 각 권역 내의 16개의 공립작은도서관과 6개소 직영작은도서관을 전담운영하며, 매달 통계제출을 비롯하여 행정업무 지시, 상/하반기 현장점검 및 매년 작은도서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와 별도로 2년에 1번씩 경기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평가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작은도서관 사서는 도서관 운영과 사업을 병행하면서 매년 엄청난 양의 평가자료까지 준비해야 하는 실정임.
- ◇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으로는 사서 1명과 단시간근로자가 지원되고 있으나 운영시간에 비해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부족한 탓에, 사서가 대출·반납 등 이용자를 응대하는 동시에 사업 기획, 프로그램 진행(모니터링), 도서구입 및 등록 등의 행정업무를 함께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도서관의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사서가 외부회의 참여나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무 보조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 ◇ 현재는 부천시립도서관 각 권역의 담당자가 작은도서관 사서대표 1인을 통한 업무전달(공문 발송, 보조금 교부, 지도점검,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위탁의 협력관계라 하기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동등한 협력관계로서의 전담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통계, 평가 등의 행정업무를 간소화시키고 부천시의 도서관 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제안내용

1. 공립 작은도서관 1개소에 상시근무 보조인력 배치
2. 부천시립도서관과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 간 협의체 구성 및 정례화

제안3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확대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슬로건 아래 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며,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또한 공공 및 작은도서관의 기본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청소년과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의 경우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생애주기별 도서관 서비스에 있어서 취약한 현실임.
-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인구 증가에 맞는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특정 부문·계층별로 ‘책의 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청소년 책의 해’ 사업 추진에 이어 2021년에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펼친 바 있음. 이처럼 청소년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 부천시의 경우 송내어울마당 내에 위치한 부천시립송내도서관이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시온고등학교와 중원중학교와 연계하여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21년 제18기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또는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을 조사한 결과 ‘시간부족’, ‘도서관에 대한 흥미 부족’, ‘이용의 불편함’, ‘청소년증, 학생증, 도서관증 등 카드가 너무 많음’, ‘학교도서관에 다양한 도서가 없음’ 등의 의견이 도출됨
- ◇ 청소년의 경우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만큼 접근성을 고려하여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며, 청소년을 위한 정보활용교육 또한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활성화되어야 함.
- ◇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로는 부천시립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 구입 시 큰글자도서를 포함하여 구입하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간 10권 내외의 큰글자도서를 순회문고로 지원하는 데 그쳐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층 이용자들을 위한 대활자본 자료 제공 및 정보문화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제안내용

1.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간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
2. 청소년 및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10

장애인복지(거주시설) 분야

제안1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지원 체험홈 운영비 지원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가운데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주거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 등에 대한 체험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체험홈이 운영되고 있음
- ◇ 체험홈은 대규모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거주지에 설치하여 운영되어야 함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관리운영비 지원과는 별도로 관리비 및 난방비, 지역사회편의시설이용 및 문화생활 등을 지원하기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비용 등 추가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 발생함
- ◇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입각하여 부천시에서도 시설장애인들의 지역사회복귀 준비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이 확대 운영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 서울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비 매월 30만원과 매월 10일간의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월 10일의 대체인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같은경우에는 매월 100만원의 별도의 체험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 2019년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2019~2023) 보고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그 개요로는 거주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 4개소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음
- ◇ 2022년 현재 부천시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제안내용

1.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설치 운영에 따른 별도의 운영비 지원
 - 월100만원씩 연간1,200만원
2.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운영하는 신규 체험홈 설치 지원

제안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체험홈 운영 활성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으로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체험홈이 부천시에서 2개소 운영되고 있음. 2021년 하반기부터 입주하여 진행되고 있음 (부천IL-발달장애인 남성 2명, 현무IL-여성 2명)
사업 시행 2년 차인 올해, 전체 운영비는 각 센터당 4천만원인데 그중 전담인력(코디네이터)의 인건비가 89%, 운영비 4%를 차지하여 실질적으로 입주자의 자립생활을 위한 훈련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전담인력의 인건비 상승을 예상하면 전체 운영비의 증액이 필요함
- ◇ 초기 자립생활 모델을 기반으로 수립된 2017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구축된 자립전환지원체계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공동생활가정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이후 지역사회로의 자립전환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2차 자립준비 단계로 자립 생활주택이 기획되었음. 하지만 최근 장애인복지와 자립생활지원 분야에서 관심받고 적용되고 있는 사람중심모델, 지원생활모델 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단계별 구분은 중요하지 않으며 현장에서의 의견 또한 단계별 지원의 차별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이미 서울시에서는 사람중심모델을 기반으로 체험홈 및 주택을 운영하고 있기에 부천시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반영하여 실천하는데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음. 운영기관과 전담인력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체험홈 및 주택 운영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체험홈 담당 종사자 정담회 및 체계적인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체계적인 행정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 ◇ 경기도에서는 누리센터 자립전환지원팀에 위탁하여 자립체험홈에 대한 운영기관을 지원하고 있음, 부천시에서도 관련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지원 및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제안내용

1. IL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 체험홈 운영비 증액 지원 : 직원 인건비 상승분 및 자립훈련비 지원을 위한 운영비 개소당 1,000만원 증액 지원 요구
2. 자립체험홈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및 전달체계 일원화를 통해 장애인 자립 지원 활성화

제안3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돌봄 종사자 인력 추가배치 지원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장애인복지법에 부합한 정규 신고 설치한 거주시설(구 생활시설)임에도 운영주체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는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정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예산 배정 상태임.
- ◇ 주52시간제의 돌봄서비스 영역 종사자들의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근로시간의 준수는 운영 주체가 개인인 거주시설에서는 법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특히 주된 돌봄 영역 종사자들의 교대 인력 부족 문제는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시설 정원이용자 수만큼의 서비스 기대치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해당 기초지자체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으로 제기 됨.
- ◇ 24시간, 365일 거주서비스 이용이 보장된 거주시설에서의 ‘책임돌봄’ 종사자들의 특성상 대체인력지원 시스템은 서비스 완결성을 담보하기에 거주서비스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회피대상이 됨.
- ◇ 결과적으로 서비스 현장관리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돌봄 종사자 인력 추가배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이를 통하여 장애인 거주서비스 제공에 있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인력 구성의 보장과 함께 더불어 그동안 부천시민들의 거주서비스 이용의 시간적 딜레이 문제 및 낮은 이용량에 대한 민원해소의 긍정적인 장치로 기능화 될것임.

제안내용

1. 추가 돌봄 인력 지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급여 - 정률제)
 - 소요예산 : 연간 9,360만원 (돌봄종사자 추가 3인 × 260만원 × 12개월)

제안4

거주시설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원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최근 근로기준법이 주52시간제로 근로환경이 개선되었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인력으로 중증 장애인 이용자의 서비스를 지원하기엔 인력이 너무 부족한 현실임
- ◇ 개인별 연차가 15일에서 25일까지 10일까지 차이가 나서 연차가 높은 돌봄 종사자가 이용자들 서비스에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연차 일수가 많아서 연차 휴가 시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됨
- ◇ 이에 정부에서는 직원들의 연휴가 사용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활용하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체인력은 낮근무에만 활용할 수 있고, 야간근무는 할 수 없는 상황임
-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거주시설 돌봄 종사자들이 코호트 격리되어 확진된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 길게는 7일에서 5일씩 연속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함, 2월 한달동안 코로나로 인해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수당을 계산했을 때 일천만이나 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시간외근무에 대한 추가지원이 되지 않아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대체휴일을 지원해야하는 상황으로 더 많은 돌봄 공백이 예상됨
- ◇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없는 야간근무를 해야하는 거주시설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로 지원을 하여 거주시설 이용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함

제안내용

1. 매년 거주시설 돌봄종사자들의 연가보상지원비 개인당 연간 10일 지원 요청
 - 소요예산 : 연간 7,000만원 (거주시설 돌봄종사자 70명 × 10만원 × 연가보상일 10일)

제안5

부천시 피해 장애 아동 365 쉼터 운영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 및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등 가족이 붕괴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
- ◇ 장애인 가족에게 경조사 또는 급한 용무가 있을 때 장애인 자녀를 일시 보호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함
- ◇ 또한, 최근 가정 내 폭력 및 유기, 방임 등으로 일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 아동들에게 가해자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보호되고 치료받고 돌봄을 지원받을 위기 장애 아동 쉼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 2019년 부천시에 365쉼터가 1개소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부천시의 등록장애인 3만 6천 8백여명의 욕구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13세 이하 아동은 운영 여건상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 ◇ 2019년 부천시 장애인복지종합계획에 따르면 장애인 365 쉼터를 년도별로 2020년 2개소, 2022년에는 3개소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2022년 현재 1개소 운영만 되고 있는 실정임
- ◇ 장애인 365 쉼터 운영시 생애주기에 맞는 아동과 성인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는 피해 장애 아동에 대한 별도의 쉼터 운영이 필요함
- ◇ 국비지원사업으로 피해아동 대상 365 쉼터 운영을 위한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됨, 부천시에서 적극 유치하여 부천시내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제안내용

1. 피해 장애 아동 대상 365 쉼터 확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신규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을 요구함
 - 피해 장애 아동 쉼터 신규 설치비 : 2억8천5백50만원 (국비 50% 지원)
 - 운영비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1억 8백만원 (국비 50% 지원)

11 장애인복지(이용시설) 분야

제안1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인프라 확충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2020년 12월 기준 부천시의 등록장애인은 37,378명(부천시민의 4.6%)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등록장애인 569,726명(경기도민의 4.2%) 중 수원시와 고양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음
- ◇ 2019년 부천시 장애인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조사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복지시설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를 넘었으며, 장애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조사(FGI) 결과 또한 장애인복지관 추가 건립이 영유아기 및 고령·독거장애인 조사결과에도 주요 요구로 나타남
- ◇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로 전체인구의 63.7%에 비해 58.6% 수준이며 실업률 또한 7.1%로 전체인구 4.0%의 173%에 달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23.8%, 실업률 8.2%로 전체인구 대비 37.4%와 205%에 달해 장애인 직업적 권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 부천시의 등록장애인 대비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 부족
 - 부천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4개소, 근로장애인 150명으로 부천시 등록장애인 대비 0.40%의 이용률을 보이나 경기도 145개소, 3,832명(0.67%) 대비 장애인 이용률이 60% 수준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의 장이 부족함
 - 부천시의 장애인복지관은 1개소로 경기도 38개(평균 등록장애인 15,000명당 1개소)의 복지관 수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의 설치율로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현재 용인시 3개소, 수원·성남·안산·화성·안양시 각 2개소 장애인복지관 운영)
- ◇ 부천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34품목)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교부하고 있으나 그 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관내에는 전문기관(경기도 내 수원시, 의정부시 2곳 설치)이 없어 장애인의 욕구 충족 및 4차 산업사회에 변화에 따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현재 부천시는 전략적 산업으로 지능형 로봇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음)

제안내용

1. 장애인복지관 1개소 추가 설치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 추가 설치
 - 장애인보호작업장(고용형) 1개소
 - 장애인적응훈련시설(훈련형) 1개소
3. 보조기기지원센터 1개소 신설

제안2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부천시 역할 확대 · 강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장애)은 인지능력 및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욕구를 주장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 특수성으로 전 생애에 걸쳐 사회적 돌봄과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가족의 부담 또한 매우 높은 실정임
- ◇ 부천시 등록장애인 37,378명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4,232명(38.1%)으로 그 중 발달장애인의 수는 3,331명(23.4%)로 15개의 장애유형 중 중증장애 비중(100%)과 발달장애인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높음(최근 3년간 장애인 증가율 3.4% 대비 발달장애인 증가율 9.9%)
- ◇ 부천시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1개소, 이용자 185명으로 부천시 발달장애인의 5.6%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용연령 또한 20~30대가 주류를 구성하고 있어 신체기능이 비장애인보다 조기 노화되는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돌봄 및 맞춤형서비스가 요구됨.
- ◇ 발달장애인 중 일부 장애인은 공격, 파괴, 자해행동 등 심한 도전적 행동과 전문적인 서비스 기관의 부재로 기존 인프라(주간보호시설 등)의 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다. 서울시의 경우 최중증장애인의 의미 있고 재미있는 낮활동 지원을 위한 챌린지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3기에 걸쳐 23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음
- ◇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기준 경기도 16개 시군구에 총1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부천시는 2019년 관련조례 제정 이후 그 설치를 유예하고 있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음
- ◇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평생교육은 단순한 교육의 범주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며 생존의 적극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천시는 2021년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시흥, 의정부, 구리시 참여) 등을 참조하여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 운영이 요구됨

제안내용

1. 특화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 추가 설치
 - 중고령 발달장애인 대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개소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개소
2.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개소 신설
3.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개소 신설

제안3

장애인 복지택시 일반 승용차량 도입 및 무장애 도시 기반 조성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시는 현재 부천도시공사를 통해 보행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해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량 75대(소형 승용차 1대 포함)를 장애인복지택시로 운영 중에 있으나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는 장애유형은 휠체어를 타지 않는 상지장애, 뇌병변장애, 시각, 청각, 신장, 심장, 발달장애 등도 포함하고 있음
- ◇ 부천시의 장애인 복지택시 운행 대수는 교통약자법 기준(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부천시 기준 68대) 도입률은 충족하고 있으나, 인근지역간의 이동의 제한 및 긴 대기시간 등 실제 이용자들의 체감도를 감안할 때 증차가 필요한 상황이며,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는 일반 승용차량의 조기 도입으로 예산의 효율성 증대 및 사업목적의 실효성 확대가 요구됨
- ◇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은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의무대상을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약90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9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의 경우 1.8%만 의무대상에 해당되고 있어 휠체어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접근에 어려움 있음
- ◇ 2022년 2월 10일 300제곱미터 이상 편의시설 의무대상 문제에 대한 법원의 차별구제 소송 승소판결이 있었으며, 이동권과 접근권의 문제는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유권 실현을 통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제안내용

1. 일반 승용차량 장애인 복지택시 신규 도입
2. 소규모 편의점 등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경사로 등 설치 지원(일부지역 시범사업 추진)

제안4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장애인은 그 장애로 인한 2차 질환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나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인식문제 및 편의시설 부족 등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실제 이용가능한 시설이 부족함
- ◇ 2019년 부천시 장애인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외출목적은 산책 및 운동(36.3%)이 가장 많았으며 주 운동장소는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은 49.7%이나 체육시설은 7.8% 낮게 나타났으며, 여가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장애인 여가관련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1.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 경기도 내 장애인 체육시설은 4개소(고양시 2개, 광명시, 안산시)로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세 번째로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부천시 또한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를 신장하기 위해 장애인 체육센터의 건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부천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사업 실현성을 강구할 수 있으며 그 예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유산 창출로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를 25년까지 150개소 신규 건립 지원(개소당 30~40억)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19년 30개소, 2020년 23개소, 2021년 13개소 지원 및 2022년에는 30개소 모집예정에 있음(경기도 내 화성, 가평, 김포, 안산, 포천, 이천, 의정부, 가평, 동두천, 이천, 여주, 고양, 양주, 경기광주, 시흥, 양평 등 총 16개 시군구 지원 확정)

제안내용

1. 장애인 체육센터 1개소 신설

12 장애인복지(직업재활) 분야

제안1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확보를 위한 판로확대 지원강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참여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책이자 제도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법제화되어 운영된 지 30여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정부정책의 변화와 지방이양으로 인한 운영환경의 변화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나 직업재활시설 운영 효율화, 직업재활시설의 확대를 위한 연구나 제도적 노력은 미흡한 실정임.
- ◇ 2019년 기준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683개소로 2013년도 511개소 대비 33.7% 증가하였고, 이용장애인은 19,056명으로 2013년도 14,739명 대비 29.3% 증가하였음. 경기도의 경우 2013년 79개소였던 직업재활시설이 2019년도 130개소로 60.7% 증가였으며, 이용장애인은 3,569명으로 2013년도 2,387명 대비 49.5% 증가함. 2022년 현재 부천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4개소(근로사업장 1개소, 보호작업장 3개소)에 불과함.
- ◇ 부천시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개소의 주요생산품목은 근로사업장의 마스크, 보호작업장의 제과제빵(부천해림직업재활시설), 누룽지 및 국수(샘물자리), 비누/샴푸(사랑이야기) 등이 생산되고 있음. 장기적으로 지속된 코로나의 영향으로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 이는 매출변화(감소)에도 큰 영향을 주었음. 수익창출을 통해 근로장애인의 임금을 보존해야하는 직업재활시설 특성에 의해 시설운영에도 어려움에 봉착함.
- ◇ 장애인일자리사업 평가체계 구축연구(2016, 한국장애인개발원)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매출액과 근로장애인 평균임금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직업재활시설의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편익-비용 비율이 1.27로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직업재활시설 효과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안내용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거 부천시 지역사회 내 사업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1%구입 적극 참여를 위한 홍보사업 실시
2. 소외계층 및 저소득가구 생필품 및 명절선물 지원관련 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지급 협조(시청,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3.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부스설치 연합행사 등 부천시 주최/주관

제안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손상으로 인해 사회참여 기회는 물론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음. 더 큰 문제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증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높은 장벽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용에서도 장애인 평균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고, 월 임금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음.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보조금 지원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국고 기능보강사업비로 구분됨. 근로장애인 임금(급여, 상여, 퇴직금 등)은 생상품 판매를 통해 자부담(수익금)으로 운영·지급해야 함. 그런데 훈련수당 또한 시설 자부담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평균임금은 42만 3천원으로 조사됨. 식비와 교통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적인 사용 가능 금액은 현저히 낮음. 훈련장애인의 훈련수당은 이보다도 훨씬 낮은 5만원~10만원 수준으로 식비와 교통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훈련장애인에게 돌아가는 수당은 거의 없는 수준임.
- ◇ 「최저임금법」 제7조 1항의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에 의거하여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보충 급여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며, 직업재활기금에서 보충 급여를 마련해 장애인에게 보상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일반회계로 보충 급여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이견들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 ◇ 훈련장애인의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훈련에 필요한 고정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훈련장애인들이 꾸준한 훈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훈련장애인이 근로장애인보다 중증인 경우가 많으나 정작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보호자들이 총당하고 있는 현실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따르면, 훈련 장애인 훈련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들의 훈련수당 지원을 통한 보충 급여 보완 마련 필요함.

제안내용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훈련생들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적응훈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수당 지원제도 마련
 - 소요예산 : 연간 9,600만원
 - 산출내역 : 월 10만원 × 80명(4개소) × 12개월

13 정신장애인 분야

제안1

정신장애인을 위한 생활지원주택 시범사업 제안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급성기 증상이 안정되어 약물치료 이외에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거주할 곳이 없어 퇴원하지 못하는 실정임 (부천시외의 경우 입원환자는 1,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주거시설은 재활시설로서의 공동생활 가정 두 곳(8명)뿐임)
- ◇ 탈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가 원하고 조건이 맞으면 영구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생활 전반에 대해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으며 개인적인 사생활이 보호되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독립성이 보장된 주거형태의 지원이 필요함
-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은 기본적으로 ‘재활과 자립준비’를 목표로 하며 거주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지로서의 기능에 제한적이고 그나마도 부족한 상태임
- ◇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생활지원주택 지원이 필요함
- ◇ 생활지원주택은 사회통합 돌봄의 모델이 될 수 있어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노숙인은 물론 노인주거 문제 해결에도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참여를 높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재활’에서 ‘지금 여기로’ 라는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복지부천의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음

제안내용

1. 정신장애인 생활지원주택 조례 제정 요청
2. 정신장애인 생활지원주택 시범 사업 실시
 - * 거주기간 :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음
 - * 거주인원 : 4-6인
 - * 공동사용 : 주방, 화장실, 세탁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
 - * 개인 사생활 보호 거주공간 : 1인 1침실
 - * 정신건강 전문가의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 1주택에 전문가 2인 채용
 - * 공유공간을 운영 -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이 되고 주민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유공간
3. 정신장애인 생활지원주택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의 예산 지원

14 종합사회복지관 분야

제안1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 협력 기반 강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시는 10개 광역동 행정복지센터와 10개 지역사회복지관을 1:1 매칭하여 민관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복지관의 명칭을 광역동 명칭으로 통일, 지난 2019년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 하지만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리적 한계(부천동행정복지센터와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도보 15분 거리)로 인하여 민관 협력에 제약이 많아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이 같은 건물에 있지 않은 곳에 대하여 동일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함.

제안내용

1. 신축되는 행정복지센터 건물 내 종합사회복지관 공간 마련을 통한 민관협력 기반 강화
2. 사무실 입점에 따른 정규 인력 3명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진행과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체감도 향상

제안2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제안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서울시는 2017년도부터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10호봉 미만 300포인트, 10호봉 이상 400포인트를 지급 중에 있음.
- ◇ 인근지역인 인천도 시행 중(10호봉 미만 15만원, 10호봉이상 20만원)에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2019년부터 하남시를 시작으로 양평군이 2021년 시행중에 있음.
- ◇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높은 이직률을 줄이고 사회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제도 도입을 요청함.

제안내용

1. 연차별 복지포인트 차등지급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직률을 완화

제안3

사회복지사 인건비 보존과 복지사업비 지원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시 사회복지관의 경상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합쳐진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이에 각 복지관들은 매년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보조금은 90%이상이 인건비 이거나 운영보조금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임.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인건비 충당을 위해 후원금을 확보해야 하는 복지관도 많은 상태임.
- ◇ 이에 경력직 직원 퇴직 시 신입직원의 채용을 통해 인건비 충당의 노력을 하고 있음.
- ◇ 부천시에서도 복지관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운영보조금의 인건비 비 확보는 장기근속자들의 지속적 근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임.
- ◇ 특별히, 경상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구성되어 있어 부천시 내 모든 복지관이 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외부지원 및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외부지원이 끊기거나 후원금이 줄어들 경우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지속적 사업 운영을 위한 복지사업비 편성이 필요함.

제안내용

1. 경상보조금을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복지사업비로 나누어 지원되어야 하고 각 복지관의 근로자가 지속적인 근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 인건비 신청을 통해 인건비 확보가 되었으면 함.

제안4

부천시 1인가구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정책 추진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코로나19 및 고물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속에서 지속적 경제난은 전체 대비 1~2위의 인구수인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관련 사회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확산해야 하는 과정에 있음
- ◇ 특히 1인가구의 경우 가족해체, 노후빈곤, 취업난 등으로 인해 가족단절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위험으로부터 크게 노출되어 있음
- ◇ 부천시의 경우 2021년 3월 기준 부천시 1인 가구는 전체 34만여 가구 중 11만, 지역별로 보면 30대 1인가구는 서울에, 40대 이상 1인 가구는 경기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시군구별로는 50대 이상 1인 가구는 경기 부천시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 관련하여 2018년~2020년까지 무연고 사망자는 135명임.
- ◇ 부천시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10개의 복지관이 있고 집중사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8개 운영되고 있음
- ◇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변화는 사례관리 종사자들의 환경에 있어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관리의 특성상 1인가구를 위한 특화된 정보를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함
-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수요의 정부의 복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1인 가구 사례관리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도입 필요
- ◇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각 영역 및 분야별 전문가 육성 필요
- ◇ 이와 같은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방향에 맞추어 지역사회 맞춤형 사례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선도하고, 사례관리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통한 적용 개발 및 문제점 검토 필요

제안내용

1. 사례관리 특성상 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분할과 더불어 10개 복지관을 연령대로 분류하여 1인가구를 위한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성(영역별 네트워크 구성으로 인적자원 및 정보공유 강화, 현장성을 띤 실질적인 정책 제안)
2. 1인가구 돌봄 및 지원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1인가구 돌봄 및 지원 조례 제정 요청
3. 해당 복지관별로 각 영역에 맞는 1인가구 교육 및 정보제공 및 지원을 통한 지역전문가로 육성
4. 기존 사례관리 외에 지역사회 맞춤형 1인가구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운영

제안5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확대

제안배경 및 필요성

<가정폭력을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 ◇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가정폭력 사건의 구속률은 약 1%이며, 2018년은 1%가 되지 않음.
- ◇ 2017년과 2018년 9월~11월 검찰에서 다뤄진 상해 관련 가정폭력범죄 분석 결과,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42.4%, 기소처분 30.1%, 불기소처분 22.4%로 나타났고, 2019년 가정폭력 신고건수 240,723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전체 신고 건수의 5.5%에 불과함. 이 중에서도 접근행위 제한을 처분받은 사건은 58건밖에 되지 않음.
- ◇ 가정폭력을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 및 가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처벌 초점이 가해자 처벌이 아닌 ‘가정 유지’를 중점으로 두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이 미미함.
- ◇ 낮은 처벌 강도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경찰 신고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고 이에, 사건의 피해 규모는 확대되고 있음.
- ◇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서 진행한 2018년 부천시 여성 대상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기혼여성의 17.8%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되어 지낼 공간 부족>

- ◇ 가정폭력 전국 2269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정폭력피해자 쉼터가 설치된 지자체는 55곳으로 설치 비율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 주거 지원시설 공급 정책에 의한 임대 주택 조건은 단체 보호 시설 입소 후 6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제공 받을 수 있고, 공급 수 또한 매우 적어 실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함.
- ◇ 해외사례의 경우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원하여 긴급하게 숙박업소 투숙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비함.
- ◇ 부천시는 2022년 1월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하여 ‘부천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지원 시설 및 지원 또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제안내용

1.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개인·가정의 문제→사회적 문제)활동 진행
2. 경찰 개입 시 초기 진단 강화 및 모니터링 활성화
3.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주거지원 및 지원시설 확대
4. 가정폭력 예방 교육

제안6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제안 2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2015년 부천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지침 ‘민간위탁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관련 ‘시간외 근무 수당’ 의 경우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지급기준, 매월 지급, 지급액은 연 84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 ◇ 이에 부천시사회복지관협회 2017-33(2017.12.06.)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부천시 민간위탁사무지침 일부 개정 요청’ 을 하였고, 따른 부천시는 검토결과 알림 공문(복지정책과 -8548(2018.2.20.)을 통해서 2018년부터 ‘사회복지관에 한하여 법인전입금 등 지급가능하다’ 고 안내 한바 있다. 이에 기관별 사정에 따라서 법인전입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기관마다 격차 및 예산 부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 또한 2018년 당시 ‘연장근로수당’ 을 ‘민간 위탁금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금액을 법인전입금등으로 지급가능(근로기준법 준수 철저). 향후 1인당 가능한 시간으로 변경 검토’ 라고 명시하였으나, 종사자 1인당 가능한 시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후 논의된 바는 없었다. 따라서 ‘부천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지침’ 개정이 요구된다.
- ◇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높은 이직률을 줄이고 사회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한다.

제안내용

1. 연장근로수당 연84만원 규정을 ‘시간’ 기준으로 변경
2. 연장근로수당은 보조금, 비지정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으로 지급

제안7

복지시설 소외지역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반 마련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역곡1,2동은 타 지역에 비해 복지시설이 없어 상대적 복지 소외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 ◇ 역곡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라 다수의 주민이 유입이 예상되는바, 역곡동 지역에 복지관 분관 설치와 인력 지원을 통해 역곡동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옥길동 임대아파트 입주 초기 종합사회복지관 입주가 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민원과 주민 욕구 해결을 위해 최근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설치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제안내용

1. 부천동 역곡현장민원실(구 역곡1동주민센터), 역곡자치회관(구 역곡자치회관) 내 이동복지관 운영을 위한 복지상담실 마련과 담당 인력 지원을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
2. 역곡동 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 분관 설치 및 정규 인력 3명 등 지원으로 복지시설 소외지역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15 청소년 분야

제안1

전염병에 대비한 공공기관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수립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코로나 상황의 공공기관방역체계는 아동·청소년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
 - 무조건 문닫기
 - 지역아동센터, 학원, 게임방 등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출입함
- ◇ 코로나 방황 증가 : 거리에 떠도는 아이들, 제제보다는 적절한 보호 필요함
- ◇ 방역체계가 가장 잘 되어 있고 건물이 있는 공공기관이 문만 닫는다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시민의 불만 제기
- ◇ 전면폐쇄가 아닌 유연한 개방 및 구체적 보호서비스 필요
- ◇ 전염병에 대비한 공공기관의 아동·청소년보호체계를 적극적으로 수립할 것이 필요함.

제안내용

1. 공공기관의 전염병 대비 아동·청소년보호시스템의 공적수립
2. 전면적 문닫기가 아닌 유연한 보호체계 의무화
3.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에 제한하지 않는 보편적 보호와 돌봄시스템
4. 보호 및 교육을 위한 현실적 서비스시스템 구축
 - 저학년의 학습지도문제 : 맞벌이 부모시 온라인학습지도의 어려움에 대비한 서비스개발필요

제안2

위기아동·청소년 돌봄시스템 구축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역인근을 중심으로 가출아동·청소년 증가 & 이주민(특히 중국)아동·청소년의 배회 증가
 - 언어 및 문화갈등, 소외와 배제로 인한 문제발생 우려됨
 - 양육자의 생계유지로 방임된 아동들을 보호할 필요
 - 가출청소년에게 위험한 일자리(성매매 등) 및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짐
- ◇ 거리아동·청소년을 즉시 발견하여 조치할 인력 및 시스템 구축 필요
-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및 친족 내 성폭력·강간이 증가함
- ◇ 신고 및 상담체계는 있으나 단, 장기적 보호쉼터 없음
- ◇ 가해아동·청소년의 교육·수용시설 없으므로 피해자가 집을 떠나는 부당한 상황
-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조기개입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필요

제안내용

1. 가출아동·청소년들이 모여드는 부천역에 **365안전센터** 필요
 - 거리보호 및 문제해결시스템 구축 필요 :
 - 긴급의식주해결(쉼터연결)/ 위험상황방지(성매매등)
 - 성상담, 일자리상담, 갈등해결상담 등 보호망 가동
 - 새로 건물을 구축하지않고 기존시설이나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지원을 하면 효율적일 것임
예 : 현재 부천역에 위치한 청개구리청소년심야식당, 일시쉼터별사탕 등을 활용,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밤에 활동할 수 있는 인력 및 행정간사 보강 등 방안 강구
 - 청소년 자립 지원
자립기금 지원제도(저금리대출, 청년적금, 일자리, 정신건강 지원시스템)
2.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설치
 - 아동·청소년 및 장애아동·청소년 피해자 전용쉼터
 - 쉼터 내 전문적 치유 및 보호시스템 구축
3. 부천에 **위탁가정센터** 적극 도입, 시민의 참여 활성화
 - 시설만이 답이 아님
 - 시설탈피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가정센터의 독립적 운영 필요
 - 위탁가정 모집, 훈련, 지속가능 관리
4.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사** 배치
 - <스마트 유스센터> 설치 혹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터넷중독전담 상담사 배치 및 사업 예산 확보

제안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학교 밖 청소년이 청년이 되기 전 진로를 결정-청소년 시기에 미래 설계 준비를 위한 취업지원 필요성 대두
- ◇ 부천시의 공공시장영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부천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 시행과 저소득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사업에 대한 일정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과 연계한 공공영역시장 서비스 사업의 개발이 요구되어짐

제안내용

1. 부천시형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제도**(가칭)
부천시 거점 지역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고용효과 창출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자활 도모
2. 부천시형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개정 및 전용공간 설치
 - 법률에 의거한 조례
 -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전용공간, 1인가구 지원
3. 부천시형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급여사업**(가칭)
재학생의 교육급여와 형평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급여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중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의 교육권과 교육복지의 혜택 보장

제안4

청소년·청년 등을 위한 안심아르바이트 공공플랫폼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현재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아르바이트 플랫폼의 경우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취업 사기 업체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등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음
- ◇ 청소년과 청년들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흔한 일이 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양질의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며, 노동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음
- ◇ 대다수의 아르바이트 플랫폼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구직정보가 공공연하게 게시되어 있고, 실체가 없는 사업주임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없어 선의의 구직자들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길로 유인하고 있음
- ◇ 사회적으로 큰 손실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아르바이트 플랫폼을 통해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범죄조직에 이용되어 범죄행위에 가담함에 따라 일상이 무너지는 실형선고를 받고 전과자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 ◇ 청소년 등의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양질의 아르바이트 제공이 필요하며,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올바른 근로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정직한 사업주들을 독려하고 지지하여 부천시에 건전한 아르바이트 문화를 조성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함

제안내용

1. 안심아르바이트 공공플랫폼의 운영과 지원
: 플랫폼 이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모니터링, 근로관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진행, 분쟁 발생 시 조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과 관련 지원, 정직한 사업주와 성실한 근로자를 선별하고 이들을 연결해주는 주요매개체의 역할, 범죄와 연결되는 불량 일자리 차단 및 악성근로자로부터 사업주 보호 등
2. 부천시 관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를 칭찬하고 격려하여 ‘착한 사업주’를 선정하고, 사업의 홍보를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함
3. 노동문제 상담, 취업사기나 보이스피싱가담 예방 등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공공지원

제안5

부천시 직업계고 졸업생(후기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에는 현재 4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2,558명, 일반고 직업위탁반에는 전체 일반고 학생(15,428명) 대비 4.1% 정도(2021년 기준). 세움은 지난 2021년 21명의 직업계고(특성화고 및 일반고 직업위탁반 학생)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했으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
- ◇ 대상자들 대부분 처음에는 직업계고를 선택한 이유로 대학진학보다 취업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었지만, 학교에서 연계하는 일자리의 수준이 낮고 대학 비진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결정을 바꾸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 ◇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한 졸업생들은 중도 퇴사율이 높아 3년 이내에 정규적인 일자리와 소속이 없는 처지가 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그 어떠한 공동체의 지원 없이 가족의 지원과 개인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됨. 이는 직업계고 졸업생뿐만 아니라 인문계고 졸업생 중 대학 비진학 청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문제임.
- ◇ 이런 상황의 후기 청소년(20~24세)들은 보통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고립되거나 단절되는 경우가 많음. 여기에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제안내용

1. 직업계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인 청년(후기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 청년 지원정책이 구직 및 취업 지원에 쏠려있지만 정작 제도 이용 접근성은 떨어지는 상황임. 20대 초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청년 지원센터가 필요함.
- 주무부처별로 파편화된 서비스로 인해 대상 청년이 지원 제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서로 다른 지원조건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안내할 기관이 요구됨.
-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등 소속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기본적인 관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가 필요함.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 차원의 지원센터 설립.
- 20대 청년에게도 진로 교육 및 프로그램은 필요함.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진로와 심리상담을 포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기관의 역할의 필요성.

제안6

보·교육기관 및 공공급식 친환경급식 실현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공공조달, 공동구매를 통한 친환경 급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와 달리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민간업자를 통한 개별구매가 주를 이루는 등 학부모들의 식재료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는 상황.
- ◇ 유·초·중·고 8만여명(학부모 및 관계자 포함 30여만명)
- ◇ 어린이집 500여개 : 16,000여명
- ◇ 지역아동센터 61개, 그룹홈 4개, 다함께 돌봄 7개 : 2,000여명

제안내용

1. 전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교육기관 등에 대한 친환경급식 실시
 - 모든 식재료에서 GMO식품 추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먹거리 전 분야에 걸친 친환경급식 실시 등
2. 시에서 운영하는 관공서 구내식당 직영화 및 친환경급식 실시
3. 경로식당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급식시설의 친환경급식

제안7

부천시형 청소년 통합(공적+문화+복지) 카드 제작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기존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만 9세부터 18세까지 비재학·재학 중인 청소년 모두에게 구분 없이 교통카드 기능과 각종 할인, 일반 결제가 가능한 대한민국 공적 신분증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발급률(2020년)은 13.24%로 10명 중 8명 이상이 청소년증이 없는 상황임.
- ◇ 나아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조로 그동안 몇 차례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서비스나 혜택이 부족하고, 관련 부처의 정책 추진 의지도 낮아 정체되어 있음.
- ◇ 이에 부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바라는 직접적인 욕구를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부천시만의 차별화된 청소년 권리 증진과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시책사업*으로 브랜드화한다면 지방정부 우수사례로 손꼽힐 것이 예상됨.
* 해외 선진사례: European Youth Card(유럽 전역의 36개국에서 여행, 문화, 숙박, 교육,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청소년 할인 혜택과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https://www.eyca.org/>)
- ◇ (청소년 권리) 부천이 선도적으로 청소년 시민을 사회적으로 인정해 신분을 공적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구조적 차별이 발생하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공적제도가 필요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이용한다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제거해야 함.
- ◇ (청소년 문화) 부천은 ‘문화특별시’라는 시정 목표에 따라 다양한 문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천시 청소년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체감하는 문화예술 향유의 수준은 문화도시 이미지와는 달리 현저히 낮은 수준임. 부천시 청소년들은 누구나 문화도시 시민으로서 문화활동을 향유한다는 경험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과 지원이 필요함.
- ◇ (청소년 복지) 2017년 부천시 청소년 생활실태와 요구조사 결과 중, 하고 싶은 활동 1위는 ‘여행’ (10.1%)이지만 실제 활동 경험은 0.3%로 청소년의 요구와 실제 경험과의 차이가 큼. 일상의 활동 요구가 실현되지 못한 상태로 청소년들의 삶이 지속된다는 것은 청소년정책이나 사회문화적 지원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함. 기존 복지카드, 부천페이 등은 성인 대상 중심의 정책으로, 부천시의 시민 구성원으로서 청소년도 일상생활에서 함께 체감하고 누릴 수 있는 복지 지원 확대가 필요함.

제안내용

- ◇ 청소년 공적카드 + 문화카드 + 복지카드 기능을 통합한 “부천시형 청소년 통합 카드” 제작
 - ⇒ (공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상관없이 부천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얻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기능 강화와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 ⇒ (문화) 모든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체험활동 정보제공 및 비용 지원 등 청소년들이 쉽게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의 문화예술 접근성 개선
 - ⇒ (복지) 청소년이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여행 활동, 등산 및 캠핑 등 야외활동, 스포츠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자율적인 자기 계발 활동 지원

제안8

청소년전담공무원제 의무 시행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취지의 일환이자 관할 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수렴,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 ◇ 청소년의 성장 속도와 문화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 전문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청소년 업무를 담당해야 함.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공무원의 근무형태상 청소년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임. 게다가 예전부터 자치구 청소년부서는 한직이고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팽배해 왔음. 청소년 업무는 관할 청소년단체나 시설에 예산만 지원해주면 된다는 인식을 가진 공무원도 많은 것이 현실임.
- ◇ 청소년계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지역사회 청소년육성에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계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청소년전담공무원제도 확대는 청소년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중앙과 지방의 청소년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임

제안내용

1. 청소년 정책 실현을 위한 청소년 담당부서의 인원 보강 및 청소년전담공무원 배치
2. 실질적인 청소년정책 추진 및 수행기능 강화를 위하여 팀장급에서의 전담공무원 필요

제안9

위원회 참여를 통한 청소년 대표성 확보

제안배경 및 필요성

1. 부천시청소년기본조례

제4장 부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제17조(위원회의 구성)

-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제6조에 따른 참여위원회 위원

2.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장 참여예산시민위원회·청소년위원회 제7조(시민·청소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시에 주민의 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둔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부천시 아동청소년인권조례

제21조(위원회의 구성)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청소년 담당부서의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8.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대표

4. 부천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 ③ 당연직 위원은 부천시 교육업무 담당과장, 부천미래교육센터의 장,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4. 교육의 대상인 청소년 대표

- ◇ 부천시 조례 중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조례는 11개가 있으며 이 중 청소년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는 5개로 확인됨
- ◇ 이마저도 일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는 2개이며 나머지는 학생대표이거나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제한되어 있음
- ◇ 현재 청소년과 관련된 조례는 부천시 아동의 놀권리보장조례,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부천시청소년노동인권증진조례, 부천시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학교방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지원 조례가 있음
- ◇ 하지만 청소년이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되어 있어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 ◇ 부천시 **모든 청소년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소년 참여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제안내용

1. 청소년 참여를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과정에 깊이 있게 관여하며 선택하고 결정하며 책임지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기관 마련이 필요함.
2. 부천시에 구성되어있는 각 영역의 위원회에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로 청소년과 관련된 위원회에 청소년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제안

참여단체 현황

[별첨]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책 제안 참여단체 현황

1. 노동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정명순	321-1310	
2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박종현	653-0444	부천시 노동복지 회관 감정노동 관련 네트워크 기관
3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이영진	679-8279	
4	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영주	329-8663	
5	부천시요양간병보호사협회	김광민	675-7517	
6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박동옥	323-9946	
7	경기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박혜준	654-7399	
8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최종복	677-9090	
9	사회적기업 희망나눔	조갑남	323-9408	
10	유베이스	송기홍	1577-6824	

* 노동 분야는 감정노동과 관련된 영역으로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노동복지회관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리스트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인복지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이덕수	347-9534	
2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장기욱	667-0261	
3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김상봉	683-9290	
4	부천시니어클럽	권치영	668-4107	
5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주	683-1389	
6	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영주	329-8663	
7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	이승주	663-9577	
8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이정권	713-7300	
9	삼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조재일	322-1203	

3. 문해교육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박현	032-713-8181	
2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권혁철	032-653-6131	
3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정명순	032-679-2900	
4	대산종합사회복지관	차재경	032-665-6061	

5	심곡동주민자치회	신상현	032-668-6866	
6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방찬일	032-323-3162	
7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최종복	032-677-9090	
8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최보솔	032-625-8474	
9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정성기	032-652-0420	
10	소사노인복지관	이덕수	032-347-9534	
11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이명위	032-349-3100	
12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최영	032-325-2161	
13	오정노인복지관	김상봉	032-683-9290	
14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천경희	032-677-0108	
15	원미노인복지관	장기욱	032-667-0261	

4. 보건의료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영주	675-7517	

5. 아동복지 분야

연번	지역아동센터명	센터장	연락처	비고
1	새롬지역아동센터	김경희	671-2354	
2	도깨비지역아동센터	김춘식	655-6638	
3	새날지역아동센터	김정희	675-0104	
4	살롬지역아동센터	김재남	613-3335	
5	원미지역아동센터	한매역	614-8439	
6	성산지역아동센터	송정아	672-8291	
7	영성지역아동센터	이은실	675-0175	
8	역곡지역아동센터	박은희	351-0407	
9	사랑의지역아동센터	한혜선	657-0153	
10	라이프지역아동센터	이창수	677-3984	
11	보람지역아동센터	최영신	328-0193	
12	해피존우리지역아동센터	염미숙	668-1318	
13	민들레지역아동센터	김소운	611-0101	
14	한울지역아동센터	한희정	261-1133	
15	서부지역아동센터	송민규	613-7656	
16	다정한지역아동센터	유정숙	348-2234	
17	그린지역아동센터	김종욱	677-3033	
18	원미산지역아동센터	이주연	347-5678	

19	우리세상지역아동센터	김예지	678-0671	
20	충만지역아동센터	최은영	070-8281-7237	
21	오순도순지역아동센터	마종열	661-1829	
22	행복플러스지역아동센터	최정인	657-0192	
23	심곡지역아동센터	김상훈	612-1997	
24	오정동지역아동센터	안현진	679-5979	
25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윤정해	671-1442	
26	지구촌지역아동센터	김옥미	201-7736	
27	꿈사랑지역아동센터	김영숙	676-9786	
28	좋은터지역아동센터	유제옥	677-1574	
29	영광지역아동센터	김경희	674-5073	
30	한우리지역아동센터	강신경	674-0191	
31	경서지역아동센터	박리라	684-8250	
32	골든벨지역아동센터	양정애	674-1421	
33	고강꿈지역아동센터	송영흠	672-0196	
34	한결지역아동센터	최향숙	672-1070	
35	비전지역아동센터	장미숙	070-8230-8993	
36	고강동지역아동센터	이은형	681-0004	
37	삼정지역아동센터	김인경	676-0079	
38	원중지역아동센터	박효순	677-0438	
39	이레지역아동센터	조복임	070-4964-9737	
40	도담지역아동센터	김유화	341-1573	
41	이웃사랑지역아동센터	배영옥	345-2540	
42	한세지역아동센터	조경자	614-0691	
43	더높이지역아동센터	박지훈	347-3332	
44	부천지역아동센터	송인섬	664-9192	
45	샘터지역아동센터	박희주	611-9966	
46	솔로몬지역아동센터	박한나	347-0754	
47	송내지역아동센터	채경아	656-0671	
48	다음지역아동센터	조윤정	663-5497	
49	꿈뜰지역아동센터	박정란	611-1355	
50	솔안지역아동센터	이영희	070-7404-1318	
51	녹색지역아동센터	이재화	341-0308	
52	가람지역아동센터	이혜란	655-0428	
53	소사지역아동센터	박성균	346-9077	
54	애솔지역아동센터	윤현주	070-7404-1319	
55	우리나라지역아동센터	이향숙	349-0680	

56	신광지역아동센터	구자춘	655-1615	
57	해오름지역아동센터	이영옥	347-4507	
58	시립옥길지역아동센터	김미숙	341-0672	

6. 여성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전성민	322-0700	
2	은가람빌	김은희	343-4398	

7. 외국인주민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손인환	654-0664	
2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욱제	327-1370	
3	대산종합사회복지관	차재경	665-6061	
4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정명순	679-2900	
5	삼정종합복지관	방찬일	323-3162	
6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344-1412	
7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란주, 이완	684-0244	
8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송연순	348-7575	

8. 자활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송예순	349-2355	
2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박혜준	654-7399	
3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부천니눔지역자활센터	박동옥	323-9946	

9. 작은도서관 분야

연번	도서관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꿈꾸는새싹작은도서관	천경희	070-5176-2453	
2	꿈나무가족도서관	김광운	345-5919	
3	글마루작은도서관	김광운	346-3451	
4	도란도란작은도서관	최중복	679-9702	
5	무지개작은도서관	천경희	342-0108	
6	민들레흙씨작은도서관	최영	322-9702	

7	복사꽃필무렵작은도서관	차재경	665-6053	
8	사랑나무가족도서관	박종현	661-3034	
9	상동어울마당작은도서관	정성기	612-5615	
10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	최영	348-7077	
11	시온열린작은도서관	김영민	340-0194	
12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방찬일	323-3160	
13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	이원돈	682-5800	
14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정주열	661-8366	
15	햇살이가득한작은도서관	김광운	652-3172	
16	행복한작은도서관	정명순	679-2907	

10. 장애인복지(거주시설)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부천해림요양원	이현웅	666-7990	
2	부천해림원	임명호	666-7991	
3	로템나무	양기영	652-5002	
4	라온제나	김우정	710-7326	
5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용현	665-2580	
6	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수경	216-0223	

11. 장애인복지(이용시설)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효민	670-1100	
2	해밀도서관(점자도서관)	이상희	650-4600	
3	안다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건식	216-1202	
4	그루터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금순	322-6644	
5	아름다운집 주간보호시설	홍종성	348-9292	
6	실로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조성욱	328-0339	
7	우리동네 부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조영미	665-6603	
8	희망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희찬	665-7007	
9	하늘아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범철	349-6828	
10	부천 사랑터주간보호시설	권지현	215-8749	
11	물댄동산 주간보호시설	전명진	345-6966	
12	서로나눔주간보호센터	윤옥경	070-4042-9462	
13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센터	이효민	670-1136	
14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시지부	허혜영	656-7797	
15	한국장애인부모회 부천시지부	김연동	611-6632	

12. 장애인복지(직업재활)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남권우	671-2500	
2	부천헤림직업재활시설	권미영	611-7994	
3	사랑이야기	김병관	719-2369	
4	샘물자리	정현주	662-2755	

13. 정신장애인복지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동광임파워먼트센터	김장배	032-323-3206	
2	쉐어하우스	변가윤	032-349-3312	
3	세천구	류선영	032-662-3379	
4	부천공동희망학교	박성민	032-679-1901	
5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김신경	032-654-4024	
6	사회적협동조합 뿌리샘	유병연	032-341-3314	

14. 종합사회복지관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채희성	032-612-0726 032-324-0723~4	
2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방찬일	032-323-3162	
3	대산종합사회복지관	차재경	032-665-6061~2	
4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박현	032-719-8180	
5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권혁철	032-653-6131	
6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이명위	032-349-3100	
7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정성기	032-252-0420	
8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최영	032-325-2161	
9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최종복	032-677-9090	
10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천경희	032-677-0108	

15. 청소년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고리울청소년센터 꾸마	신용식	682-1886	
2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두근	양승부	665-9090	
3	부천청소년센터 와락	김수경	325-4300	
4	산울림청소년센터	유승중	344-4480	
5	소사청소년센터	김미희	344-0720	
6	송내청소년센터 나래	조윤령	656-8085	
7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백진현	325-3002	

8	부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백진현	327-2232	
10	해봄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오세향	663-1318	
11	부천미래교육센터	이은경	344-0750	
12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윤정은	655-2252	
13	부천시청소년인권공동체세움	이계은	010-7569-0028	당사자단체
14	청개구리청소년심야식당	이정아	0507-1496-2003	거리청소년
15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조승재	010-3902-4562	당사자단체

16.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박동옥	323-9946	
2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송예순	349-2355	
3	경기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박혜준	654-7399	
4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주	683-1389	
5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최중복	677-9090	
6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	김병학	347-7205	
7	동광임파워먼트센터	김장배	323-3206	
8	대산종합사회복지관	차재경	665-6061	
9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박현	719-8180	
10	부천노인복지센터	이중화	613-7002	
1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권혁철	653-6131	
12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손인환	654-0664	
13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	이승주	663-9577	
14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박중현	661-3030	
15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정명순	679-2900	
16	부천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권치영	668-4107	
17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이덕수	347-9534	
18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김상봉	683-9290	
19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장기욱	667-0261	
20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효민	670-1100	
21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남권우	671-2500	
22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인경	327-2866	대외협력위원 김경희
23	부천헤림요양원	이현웅	666-7990	
24	부천헤림원	임명호	666-7990	
25	부천헤림직업재활시설	권미영	611-7994	
26	삼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조재일	322-1203	
27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방찬일	323-3162	
28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정성기	652-0420	
29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최영	325-2161	

30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이명위	349-3100	
31	삼곡동종합사회복지관	채희성	612-0726	
32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천경희	677-0108	
33	은가람 빌	김은희	343-4398	
34	(주)나눔과돌봄	김경옥	323-9264	
35	(사)부천희망재단	정인조	321-9123	상임이사 김범용
36	사)위드프렌즈	배영옥	346-9077	
37	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부천지부	이옥녀	323-2472	
38	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수경	216-0223	
39	해밀도서관	이상희	650-4600	
40	소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강영선	349-9192	
41	샘물자리	정현주	662-2755	

6.1 지방선거 부천시
사회복지정책 제안집

발행일 2022. 04.

발행처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86,
 탑프라자 403호

전 화 (032) 662-7713 / 팩스 0505-718-7713

E-Mail bccsw@naver.com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86, 탑프라자 403호
TEL : (032)662-7713 FAX : (0505)718-7713

 **SSN**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